

INSS 연구보고서 2020-6

2020 | INSS Research Report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김일기·김호홍

INSS 연구보고서 2020-6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 김일기·김호홍

2020 |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20-6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김일기 ikkim@inss.re.kr
김호홍 chan1304@inss.re.kr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0 인스토피아 빌딩
Tel. 02-6191-1000 Fax.02-6191-1111 www.inss.re.kr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20-6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김일기·김호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김일기·김호홍

김일기 (金一基)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건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 정치, 남북관계, 국가정보, 사이버안보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통일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통일·북한 이슈 100』, 『국가정보학』,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김정은 시대 북한정치의 특징과 전망”,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세 전망” 등이 있다.

김호홍 (金浩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

국가정보원에서 23년간 근무하였으며,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대북전략, 신안보, 남북관계 등이다.

목차

국문초록	6
I. 서론	8
1.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및 구성	13
II. 북한 정보기구의 기원과 변화	18
1. 북한 정보기구의 기원	19
2. 북한 정보기구의 변화	21
3.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체계	27
III.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내 정보기구	34
1. 국가보위성	35
2. 사회안전성	45
3. 보위국	54
IV.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해외 정보기구	60
1. 정찰총국	61
2. 통일전선부	70
3. 문화교류국	80

V.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구의 특징	84
1. 김정은 직할 체제를 통한 정보기구 운용	85
2. 김여정과 조직지도부를 통한 정보기구 감시·통제	86
3. 정보기구의 사이버공격 증가	91
4. 정보기구의 조직 변화	96
5. 국가보위성의 대남 정보활동 강화	97
VI. 결론: 전망과 시사점	100
Abstract	106
참고문헌	110

국문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구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체계는 2009년 개편된 정보기구 시스템을 기본골격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 내각으로 이전했던 225국이 노동당으로 복귀하여 문화교류국으로 개칭하였다. 북한의 정보기구는 정보기관의 업무 범위에 따라 국내 정보기구와 대남·해외 정보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정보기구는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보위국 그리고 대남·해외 정보 기구는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정보기구는 김정은에게 직보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들은 당·정·군에 각각 배치되어 있지만, 정보활동 업무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둘째, 김여정 제1부부장과 조직지도부가 정보기구에 대한 당적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지도부는 각각의 정보기관들에 독립부서인 정치국을 두고 있으며, 정치국을 통해 개별 정보기관들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조직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 정보기구의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정찰총국의 기술정찰국을 중심으로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 등이 사이버공격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사이버 정

보수집,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사이버심리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북한 정보기구의 조직 변화는 정찰총국의 신설, 정보기구의 명칭 변경,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국가기구로의 승격, 국가보위성의 특별군사재판소 신설 등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가보위성의 대남 정보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반탐정국, 해외반탐국, 북남대화보위국을 활용하여 대남 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탈북자 관련 정보활동은 국가보위성이 전담하며, 이와 연관된 대남·해외정보는 다른 정보기관들이 보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북한의 정보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의 정보기구를 담당할 과거 노동당 ‘행정부’와 유사한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찰총국에 집중된 대남·해외 정보기구의 분산과 노동당으로 이관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정보기구를 활용한 사이버공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북한, 정보기구, 국가보위성,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1. 연구목적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수호하고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며,¹ 첩보수집(Intelligence Collection), 정보분석(Intelligence Analysis), 방첩(Counter Intelligence), 비밀공작(Covert Action) 등의 정보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² 국가안보는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사활적 가치(vital value)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활적 가치란 국가의 생존(survival), 번영(prosperity), 위신(prestige), 안정(stability) 등을 의미한다.³ 그리고 국가이익은 국가의 생존, 번영, 발전, 국위선양 등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적 가치(national value)를 의미한다.⁴ 따라서 국가이익은 국가안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영역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존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안보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국가안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국가정보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책결정자가 국가안보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데 있다. 반면 권위주의 국가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

1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대해서는 문정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문정인 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2), p. 4; 이영무·신경엽, “국가정보의 개요,” 국가정보연구회, 『분단국의 국가정보』 (서울: 박문각, 2012), pp. 23-25 참조.

2 전용, 『현대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6), p. 343.

3 문정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p. 4.

4 이영무·신경엽, “국가정보의 개요,” pp. 23-25.

해 정권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 국가들 내부에서의 반체제 세력의 활동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보활동의 목표를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두고 있으며, 정보활동 대상 역시 외국보다는 정권을 위협하는 내부 반체제 세력의 동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⁵ 즉, 권위주의 국가들의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과 체제 안보를 위한 기구로 활용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를 넘어 전체주의적인 유일지배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정보기구의 최우선 목표를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와 체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안보 목표로서 주권의 영역을 넘어 남조선 혁명과 공산화 통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⁶ 서문에서 국가의 당면목표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종목표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명시하고 있다.⁷ 북한이 국가안보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남조선 혁명’과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⁸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정보 활동은 국가안보

목표인 남조선 혁명과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수단이자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는 체제 유지와 대남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정보기구로는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보위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등이 있다. 국가보위성은 비밀경찰기관, 사회안전성은 경찰기관, 보위국은 군 정보기관이다. 정찰총국과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은 대남·해외 정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정찰총국은 국무위원회 소속, 보위국은 조선인민군 소속,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은 노동당 산하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남북대화 또는 북한의 대남도발 시 북한의 정보기구와 주요 인물들에 관한 대내외 언론 보도와 연구자들의 언급은 비논리적이면서도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추정에 가까운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북한의 정보기구에 대한 정보 부족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그동안 북한의 정보기구 연구는 국책연구기관과 정보기관 출신 연구자 그리고 북한 정보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근거와 자료에 의존하여 북한 정보기구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찾기가 어렵다. 북한의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들도 소속기관을 제외한 다른 정보기관들의 조직과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정보기구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는 현재 양적으로 부족하며 질적인 수준 또한 낮다. 기존 연구들은 북한 정보기

5 J. Michael Waller, *Secret Empire: The KGB in Russia Today*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 13; 전웅, 『현대 국가정보학』, p. 352.

6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조선노동당이 국가위에 존재하는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규정하는 법률체계는 당규약·헌법·부문법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체계와 주민생활을 규정하는 최고의 법률은 조선노동당 규약이다.

7 『조선로동당규약 서문』, 2016. 5. 9.

8 김일기·김형수,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통일정책,” 『세계지역논총』 34집 3호 (2016), p. 159.

구의 종합적 연구,⁹ 개별 정보기관 연구¹⁰, 노동당과 국가의 하위기구로서 정보기구 연구¹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연구들은 북한의 정보기구에 대한 시론적·개괄적 연구, 주요 정보기관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미진, 김정은 시대의 정보기구 변화 미반영 등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기존연구들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시작되는 2009년의 정찰총국 창설 시점에 멈추어 있으며, 김정은 정권 수립 이후의 정보기구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 직후의 대내외 우려를 뒤로 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보기구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보기구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보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의 안정성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대남 정보기구를 통해 대남전략을 기획 및 투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대북전략 구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²

그러나 문제는 모든 나라에서 정보기구는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이며

가장 보안이 요구되는 기관들이어서 실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¹³ 특히 유일지배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정보기구의 현황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구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체제 유지 동학 및 대남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보기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정보학과 북한학의 심화와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북한 정보기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정보기관의 방첩 역량 강화와 정부 부처의 대북협상 시 상대방에 대한 대비책 마련 차원에서도 북한 정보기구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범위인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 이상으로 정상적 통치가 어려워지면서 김정은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2009년을 시점으로 한다. 북한은 2008년 8월 김정일의 와병 이후 권력승계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9월의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김정일의 후계자임을 대내외에 알렸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의 와병 이후 권력승계 과정에

9 북한의 정보기구 전반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권민웅, “북한의 정보·보안 체계,” 문정인 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2); 최준택, “북한의 정보기구,” 국가정보연구회, 『분단국의 국가정보』 (서울: 박문각, 2012);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한국국가정보학회 역음,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3);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국가정보연구』 제11권 1호 (2018) 등이 있다.

10 개별 정보기관에 관한 연구는 북한 정보기관의 근무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연구 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연구자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개별 정보기구에 관한 기존연구는 III장과 IV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11 노동당과 국가기구의 하위기구로서 북한 정보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는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노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8) 등이 있다.

12 서동구, “김정은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정보·보안기구,” 『Online Series』 CO 15-04 (2015), p. 1.

13 Bruce D. Berkowitz and Allan E. Goodman, *Best Truth: Intelligence in the Information Age*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 165.

서부터 통치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김정일과의 공동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찰총국 창설 등의 정보기구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보위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등 북한의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은 정보기구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다면 보안기구로 구별할 수도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정보기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은 첩보수집, 정보분석,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의 정보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 중에서 ‘방첩’이란 일반적으로 상대국 정보기관의 첩보수집, 전복, 테러 및 파괴행위 등의 각종 공작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을 의미한다. 방첩활동은 크게 안보 위해 요소로부터 비밀을 유지하는 보안(security)과 적대국의 정보기관 요원을 무력화시키는 대간첩활동(counterespionage)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안과 방첩의 관계에 대해 쉘스키(A.N. Shulsky)는 방첩을 적극적 대 스파이활동과 수동적 보안으로 구분하면서 보안과 방첩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안은 방첩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

보안을 방첩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안과 방첩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방첩업무규정」 제2조는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전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¹⁵고 규정하여, 방첩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보안을 방첩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따라서 북한의 보안기관인 사회안전성 역시 정보기관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북한의 정보기구 분석은 정보기관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내 정보기구와 대남·해외 정보기구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국내 정보기구는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보위국 그리고 대남·해외 정보기구는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을 분석하였다. 국가보위성은 북한의 국가정보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대내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지만, 대남·해외 정보활동에 비해 국내 정보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정보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구의 현황과 특징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구의 변화를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은 서론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구성을 제시한다. 제 II 장에서는 북한 정보기구의 기원과 변화를 분석한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 정보기구의 기원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 과정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보기구의 형성과 정보기구 체계를 제시한다. 제 III 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 국내 정보기구의 현황을 분석한다.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보위국의 주요 연혁과 임무 및 조직을 분석한다. 제 IV

14 Abram N. Shulsky and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Washington D.C.: Potomac Books Inc., 2002), p. 215.

15 법제처, “방첩업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B2%A9%EC%97%85%EB%AC%B4%EA%B7%9C%EC%A0%95/\(29289,20181120](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B2%A9%EC%97%85%EB%AC%B4%EA%B7%9C%EC%A0%95/(29289,20181120) (검색일: 2020. 10. 11).

장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해외정보 기구 현황을 분석한다.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연혁과 임무 및 조직을 분석한다. 문화교류국은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지만, 정보활동의 중요성과 김정은에게 직보하는 체제를 고려하여 구분하여 분석한다. 제V장은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구의 특징을 제시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정보기구에서 나타났던 특징을 과거와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제VI장은 결론으로 북한 정보기구의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북한 정보기구의 기원과 변화

1. 북한 정보기구의 기원
2. 북한 정보기구의 변화
3.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체계

1. 북한 정보기구의 기원

북한 정보기구의 역사¹⁶는 소련 군정 시절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정권 수립과 함께 변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정보기구는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창설한 보안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 소련군은 1945년 10월 28일 ‘북조선 5도 행정국’을 창설했으며, 북조선 5도 행정국은 교육국, 교통국, 농림국, 보건국, 보안국, 사법국, 산업국, 상업국, 재정국, 체신국 등 10국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정보기구 역할을 담당했던 부서는 보안국으로 치안업무 이외에도 정보업무, 국방경비 업무, 대남공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¹⁷ 보안국의 정보처에서 정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보안국 산하의 정보공작대에서 군 관련 정찰과 정보업무를 수행했다.¹⁸

보안국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 8일 출범하면서 기능 변화를 겪게 된다.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하의 보안국은 치안 및 국경경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산하에 경비, 감찰, 호안(경호), 소방 등의 조직과 대남공작·정보를 담당하는 정치보위부를 두었다. 북한은 정치보위부 구성 이후 1946년 5월 11일 보안국에 무장조직인 보안독립여단을 신설하였다.¹⁹

16 북한 정보기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현준, 『북한의 사회 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7-23; 오형균, “김정일시대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pp. 28-32;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pp. 458-461;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p. 156-158 참조.

17 전현준, 『북한의 사회 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p. 18.

18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 157.

19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은 “보안독립여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구로서 나라의 안전

북한은 1947년 2월 27일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보안국을 내무국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국방업무를 담당하는 민족보위국이 1948년 2월 7일 신설되면서, 내무국은 경찰과 비밀경찰 업무를 그리고 민족보위국은 국방과 군 관련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장을 하게 된다.²⁰

북한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정보기구를 창설하였다. 북한 정권 수립 이전에 정보기구 역할을 했던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은 내각의 내무성으로 흡수되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등장한 내무성이 현재적 의미에서 볼 때 북한 최초의 경찰조직이자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또한, 군 관련 정보업무를 담당했던 민족보위국은 민족보위성으로 흡수되었다.

초창기 북한의 국가정보활동은 북조선노동당²² 조직부의 지도하에 내무성 정치보위국과 민족보위성 정찰국이 담당하였다. 내무성 정치보위국은 산하에 38보위부, 해주·철원·양양지구 보위부, 대외정보부 등을 두고 있었다. 민족보위성 정찰국은 대남 첩보기구를 두었으며, 이 기구는 평양 시내에 수 개소의 밀봉아지트를 설치하고 남북간을 왕래하는 공작원들을 수용·교육시켰다.²³

을 지키고 대내외 원수들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이 연설은 북한의 정보기구인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경호부대(호위총국·호위사령부)의 활동지침이 되었으며 이를 ‘5·11교시’라고 한다. 전현준, 『북한의 사회 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pp. 18-19.

20 Ibid., p. 19;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 158.

21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 158.

22 북조선노동당은 1946년 8월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으로 창립되었으며, 1949년 6월 남조선노동당과의 합당을 통해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3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하권』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pp. 57-58;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pp.

2. 북한 정보기구의 변화

가. 한국전쟁과 정보기구의 변화

북한의 정보기구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개편 과정을 겪게 된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51년 3월 내무성의 정치보위국과 기타 부문 조직을 통합하여 사회안전성을 출범시켰다. 사회안전성이라는 독립적인 정보기구의 신설은 한국전쟁 기간 중 반체제 세력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전시의 치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였다.²⁴ 사회안전성은 ①반국가행위·반혁명행위 감시, ②신원조사·외국인 방문객 감시, ③지방 치안유지·범죄단속, ④국가기관·지역 경비, ⑤교통질서·소방업무, ⑥인구조사, ⑦신분등록소 운영, ⑧기밀문서 보관·관리, ⑨교회소·강제노동 수용소 관리, ⑩철도 경비, ⑪국유·사유재산 보호, ⑫선박 출입 관리, ⑬반항공조직 운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사회안전국, 보안국, 예심국, 반항공국, 교화국, 정부호위국, 철도안전국, 경비국, 산림국, 후방국, 정치국, 통신처 등을 두었다.²⁵

사회안전성은 내무성에서 분리·독립된 지 1년 7개월 후인 1952년 10월 9일 내무성으로 다시 흡수·통합되었으며, 내무성 사회안전국이 사회안전성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사회안전성의 내무성으로 통합이유

458-459.

24 전현준, 『북한의 사회 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p. 20.

25 사회안전성의 임무와 기구에 대해서는 Ibid., p. 20 참조.

는 사회안전성의 업무 복잡화로 인한 능률성 저하와 내무성과의 대립으로 인한 치안업무의 혼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당시 방학세 사회안전상이 내무상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사회안전성 조직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내무성으로의 통합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²⁶

대남 정보기구 역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개편 과정을 겪게 된다.²⁷ 당시 대남정보기구 개편의 핵심은 대남 정보활동의 지휘부서인 노동당 조직부내의 연락부를 독립된 부서로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연락부 산하에는 기요과, 연락과, 정보과, 유격지도과, 선전교양과, 조직지도과를 두었으며, 직속부대로 '526군부대'와 공작원 양성을 위한 '금강정치학원'²⁸을 두었다. 노동당 연락부의 독립부서로의 승격은 전쟁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게릴라 부대와 지하당 공작을 배합시키는 북한의 전술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국전쟁 이후 정보기구의 변화

한국전쟁 이후인 1956년 북한은 내무성의 편제를 대폭 확장하였으며, 방학세 내무상 아래에 5명의 부상을 두고 조직으로는 9개국 7개 처를

두었다.²⁹ 내무성 9개국은 사회안전국, 감찰국, 보안국, 정치국, 총무국, 후방국, 교화국, 경비국, 경위국(호위업무)이며, 7개처는 간부처, 경비처, 반정찰처, 통신처, 반항공처, 경제안전처 등이다. 이 중 사회안전국은 이전 내무성 정치보위국 업무 중 대남·대외정보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①주민 감시, ②인민군 정치사찰, ③정부기관 주요인사 감시, ④반체제인사 감시·예심, ⑤정당·사회단체·언론·출판·종교계 사찰, ⑥대외정보 수집, ⑦한국정부 참여인사에 대한 수사·감시, ⑧방첩 사업 ⑨각 시·도 내무부 지도사업 등을 담당했다. 반정찰처가 대남·대외공작을 전담하였으며, 산하부서로 대남부, 일본부, 극동부, 경리부, 통신부, 공작부, 구라파부 등을 두었다.

북한은 1962년 10월 23일 사회안전성을 신설하고 내무성의 치안업무를 이관하였다. 그 결과 내무성은 강·하천, 도로, 토지, 산림, 영해, 호수, 항만 등 국토 및 자원 관련 관리 업무로 한정되었으며, 1964년 12월 4일 '국토관리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북한은 1968년 조선인민군 내에 정치안전국을 신설하면서 군 내부의 정보활동을 전담시켰다.³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대남정보 기구는 크게 세 차례의 변화를 겪게 된다.³¹ 첫째, 북한은 4·19 혁명을 기점으로 대남 정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1961년 제4차 당대회를 통해 지하당 조직 확대와 반미 통일전선 형성 및 남북의 통일전선 결합을 통한 공산화 통일 방침을 결정

26 Ibid., p. 21.

27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p. 459;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p. 1633-1644.

28 북한은 1945년 말 평양 근교의 강동에 정치학원(강동학원)을 설립하여 공작원과 유격대원을 양성하였으며,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초 서울 경기상업학교에 '서울정치학원'을 설립하였다. 북한은 1951년 10월 서울정치학원을 노동당 연락부 산하 '금강정치학원'으로 개칭하였으며, 동시에 해주에 '송도정치학원'을 증설하였다. 강원준, 『국가정보의 이해: 국가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서울: 서석, 2005), p. 290.

29 내무성 편제에 대해서는 전현준, 『북한의 사회 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p. 21;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 160 참조.

30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 160.

31 1960년대의 대남정보 기구 변화에 대해서는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pp. 459-461;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전서 하권』, pp. 59-60 참조.

하였다. 이러한 대남 전술의 변화에 따라 정보기구의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내무성과 민족보위성의 정보기구들을 노동당 연락국으로 통합시켰다.

둘째, 1964년 2월 27일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 혁명역량 강화'의 제시와 함께 정보기구를 개편하였다. 북한의 3대 혁명역량 강화는 북한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남한 혁명역량 강화, 국제 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 노선이다. 3대 혁명역량 강화는 김일성이 1965년 4월 14일에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연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대남 정보활동을 지휘하고 있던 노동당 연락국을 대남사업총국으로 개칭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요원들을 대폭 증원시켰다.³²

셋째, 1964년 9월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계기로 북한의 정보활동은 군사도발 공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민무력부가 주도하였다. 인민무력부는 작전국 산하 적공국을 내세워 대남공작, 대남침투, 대남도발, 대남심리전 등을 주관하였다.³³ 그러나 1967년 283부대의 게릴라 활동 및 1968년 1월 124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11월 삼척·울진의 무장간첩 남파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책임자였던 허봉학 등 군사파를 숙청하고 정보기구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북한은 당시 정보활동을 총괄하고 있던 대남사업총국을 폐지하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이 관장하게

하였다. 비서국은 산하에 연락부, 문화부, 조사부를 두었으며, 인민무력부 정찰국 업무와 조선총련 공작사업 등 대남 정보활동을 통제하였다. 또한, 대남 군사공작을 담당했던 124부대와 283부대를 제8군단이라는 특수군단으로 통합시켰다.

다. 국가정치보위부의 신설과 '통합형'에서 '분리형' 정보기구로의 변화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 채택과 함께 내각을 정무원으로 개편하면서 사회안전성을 사회안전부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73년 5월에는 김일성이 사회안전 업무와 정치보위 업무를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사회안전부 소속의 정치보위국을 독립시켜 국가정치보위부를 신설하였다. 그 결과 사회안전부는 치안질서 유지 등의 경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가정치보위부는 북한 주민과 국가기관에 대한 반혁명·반국가범죄, 방첩, 정치사찰, 대내외 정보업무,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의 비밀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 구분이 발생했다.³⁴ 1982년 초에는 당시 사회안전부장이었던 이진수가 국가정치보위부장으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사회안전부가 담당해 오던 해안 및 국경 경비 업무를 국가정치보위부로 이관하여 사회안전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³⁵

한편,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와 함께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고려연방제 제시와

32 중앙정보부, 『대남공작사』 제2권, (서울: 중앙정보부, 1973), pp. 125-141.

33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북한조사연구』, 제11권 1호 (2007), p. 84

34 전현준, 『북한의 사회 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p. 22.

35 Ibid., p. 22.

함께 대남정책의 결정권을 인민무력성에서 노동당으로 이전시켰다. 특히 김정일이 노동당 조직비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을 중심으로 대남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졌다. 정보기구의 개편 역시 대남부서들을 각자 업무 특성에 따라 대남침투, 인물포섭, 정보수집, 대남심리전, 교란, 파괴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³⁶ 이러한 과정에서 1977년 10월 통일전선부가 신설되었으며, 노동당의 정보활동은 대외조사부, 사회문화부, 작전부, 통일전선부로 구분되었다.

북한의 정보기구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가정치보위부(비밀경찰), 사회안전부(경찰), 조선인민군 정치안전국(군 정보기구), 대남정보기구 등으로 구분되었다. 1948년 9월의 북한 정권 수립과 출발한 '통합형 정보기구'에서 '분리형 정보기구'로 전환한 것이다.³⁷ '통합형 정보기구'는 첩보수집, 정보분석, 비밀공작, 방첩활동 등 모든 정보활동을 단일 정보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분리형 정보기구'는 기능별로 한 가지 특정분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 정보기구 체계는 약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본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36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p. 84.

37 통합형 정보기구의 대표적 사례는 구소련의 KGB, 중국의 국가안전부, 우리의 국가정보원을 들 수 있다. 분리형 정보기구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 해당하며 이들은 신호정보와 영상정보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단일임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분리형과 통합형 정보기구에 대해서는 전용, 『현대국가정보학』, pp. 350-351 참조.

3.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체계

가. 정찰총국의 창설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기간인 2009년 초반에 정찰총국 신설과 함께 정보기구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³⁸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은 노동당, 내각의 내무성, 군의 민족보위성을 중심으로 정보활동을 전개하여왔다. 그리고 여러 번의 정보기구 개편을 통해 국내 정보활동은 국가안전보위성(현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군 보위사령부(현 보위국)가 담당하였으며, 대남·해외 정보활동은 노동당의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현 문화교류국), 작전부, 35호실과 군의 정찰국이 담당하는 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김정일의 와병 이후 김정은으로 권력세습을 진행하면서 정보기구 역시 김정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북한의 정보기구 개편은 국방위원회 산하에 정찰총국을 신설하고 당과 군에 흩어져 있던 대남·해외 정보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노동당의 작전부와 35호실, 군의 정찰국 및 총정치국 6·15국을 통합하여 정찰총국을 신설하였으며,³⁹ 노동당의 대외연락부는 내각의 225국으로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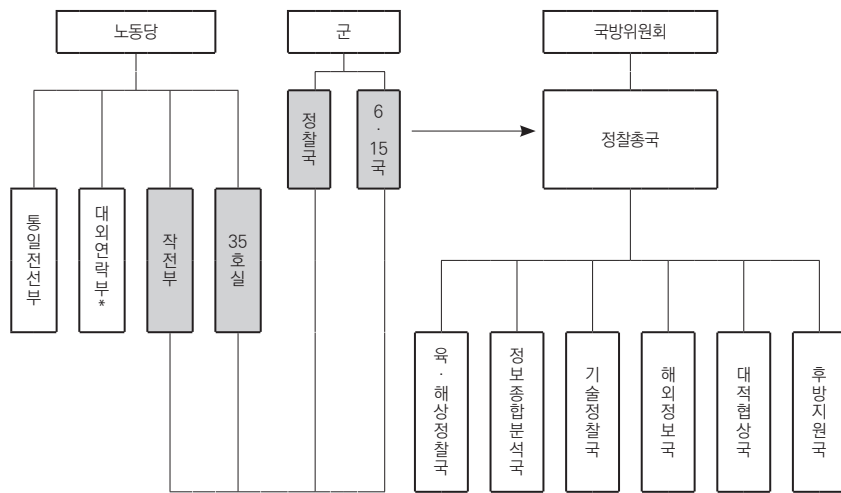
38 정찰총국의 존재는 2010년 황장엽 암살을 위해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정찰총국 공작원 두 명이 2009년 11월 김영철 정찰총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알려졌다. “北 간첩 ‘황장엽 암살 후 투신자살하려 했다,’” 『조선일보』, 2010. 4. 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21/2010042101441.html (검색일: 2020. 10. 11).

39 정찰총국으로의 통합과 주요 기관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IV장 1절 정찰총국> 참조.

정찰총국은 군의 정찰국과 6·15국 및 노동당의 35호실과 작전부 등 기존의 4개 부서를 통합한 대남·해외 정보기구이다. 북한은 1961년에 노동당 연락부, 민족보위성 정찰국, 내무성 반탐처 등 대남·해외 정보기관들을 통합하여 노동당 연락국을 설립하였으며, 1964년 2월에는 노동당 조사부를 포함시켜 대남사업총국으로 확대·개편한 적이 있었다.⁴⁰ 정찰총국은 과거 대남·해외 정보활동을 총괄·지도하기 위해 설립된 대남사업총국과 유사한 기구라고 볼 수 있다.⁴¹

정찰총국의 신설에 따른 북한의 대남·해외 정보기구 개편은 업무의 효율성 추구하고 역할 및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대남·해외 공작과 정보수집 업무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업무가 겹쳤던 각 기관의 영역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테러, 납치, 암살 등으로 악명높았던 기관들을 ‘당’에서 ‘군’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노동당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가져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보기구 개편의 최우선 목적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있었다.

〈그림 II-1〉 북한의 2009년 정보기구 개편



*대외연락부는 내각으로 이동하여 225국으로 명칭을 변경.
 ※ 출처: 최준택, “북한의 정보기구,” p. 448 수정·보완.

북한은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1975년 6월부터 대남사업부서 개편을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은 김중린이 맡고 있던 대남사업담당 비서직을 폐지하고 김일성이 직접 대남사업부서들을 지도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이 과정을 통해 김정일은 대남사업부서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김정일 후계구축 시기에 이루어졌던 북한의 정보기구 개편을 돌이켜 볼 때, 정찰총국의 창설 역시 후계자 김정은의 정보기구에 대한 장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정찰총국 창설 시기인 2009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그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을 국방위원회에 포진시킴으로써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통치 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체계를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남·해외 정보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정찰총국의 창설 역시 김정은이 정보기구들을 신속하게 장악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40 북한은 대남사업총국을 1967년 11월 허봉학 숙청 이후 해체하였으며, 그 이후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별도의 중간기구를 만들지 않았다.

41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제』 (서울: 기파랑, 2013), p. 229.

있도록 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⁴² 결국, 김정일은 과거 자신의 권력승계 경험을 통해 후계자 수업 기간이 짧은 김정은이 북한의 정보기관들을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장악·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북한의 정찰총국 신설로 대남·해외 정보활동의 주도권이 당에서 군으로 넘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대남 정보활동을 주도했던 통일전선부는 작전부과 35호실을 정찰총국에 넘겨주고, 대외연락부는 내각의 225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세력이 약화되었다. 통일전선부는 대남정책의 수립과 남북대화 및 경협사업 등 공개적인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반면 정찰총국은 대남 정보활동의 핵심부서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 225국의 통전부로의 이동과 정보기관의 명칭 변경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정보기구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북한은 2012년 말 대남공작 전문부서인 225국을 내각에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다시 재편입하였으며, 정찰총국의 정보활동 영역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225국을 문화교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의 정보기구에 대한 명칭 변경은 최근에 들어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는 국가보위성으로, 인민보안부는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을 변경하

42 Ibid., p. 231.

였다.

국무위원회 신설 이후 북한은 우리의 경찰기구 격인 인민보안성을 2020년 5월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⁴³ 인민보안성의 사회안전성으로 명칭 변경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할데 대한 명령서”를 채택하였다고 밝혔다.⁴⁴ 인민보안성의 사회안전성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인민내무군 역시 사회안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정보기관인 보위사령부 역시 2016년에 보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인민군 상륙과 반상륙방어훈련 연습지도와 관련한 보도를 내보내면서 보위사령관 조경철 대장의 직책을 보위국장으로 호칭했다.⁴⁵

북한의 정보기구에 대한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별 정보기구의 위상과 역할 및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북한이 김정일 시대의 ‘군’ 중심에서 김정은 시대의 ‘당’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변경된 명칭들이 과거 김일성 시대에 사용했던 명칭들임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김일성 따라하기’의 일환

43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류경』은 2020년 6월 2일자 “평양종합병원건설장으로 달려오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건설 현장에 지원된 자재와 물자를 언급하며 “사회안전성에서 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진행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북한, ‘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으로 이름 바꾼 듯,” 『동아일보』, 2020. 6. 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03/101338542/1> (검색일: 2020.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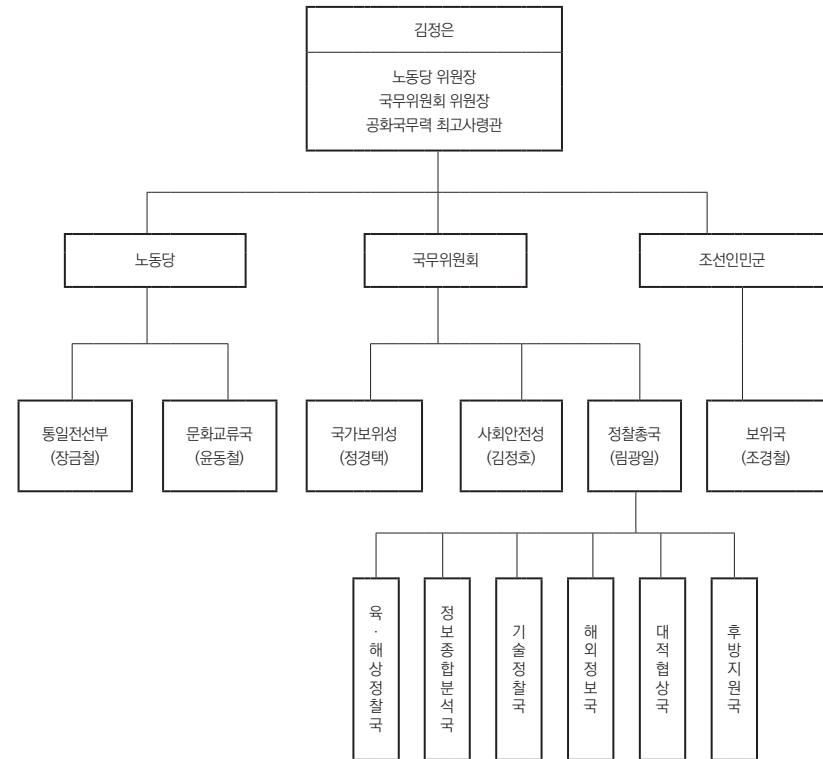
44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7기 제 4차 확대회의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지도,” 『노동신문』, 2020. 5. 24.

4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6. 5. 20.

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정보기구 체계는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 국무위원회의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경찰총국⁴⁶, 조선인민군 보위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국내 정보기구는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군보위국으로, 대남·해외 정보기구는 경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II-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체계



46 경찰총국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참모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보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 국무위원회 직속기관으로 볼 수 있다.

III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내 정보기구

- 1. 국가보위성
- 2. 사회안전성
- 3. 보위국

1. 국가보위성

가. 연혁과 임무

국가보위성은 북한의 대내외 정보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보위성은 북한의 최고 정보사찰기관으로서 과거 소련의 KGB 운용 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다.⁴⁷

국가보위성은 1952년 내무성 정치보위국으로 출발하였으며, 1962~1973년 4월까지의 사회안전부 정치보위국으로 운영되었다. 북한은 1973년 5월 사회안전부로부터 정치보위 기능을 독립시켜 국가정치보위부를 신설하였으며, 이때부터 국가보위성이 독자적인 정보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가정치보위부의 설립 배경은 1967년 갑산파 사건 이후 전문 감찰기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⁴⁸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이 가시화되는 시대적 배경과도 연결되어 있다. 국가정치보위부는 출범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협하는 장애 요인들을 적발·색출·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국가정치보위부는 1982년 정무원 산하에서 독립하면서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으며, 1993년부터 국가안전보위부로 명칭이 다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이후 국가안전보위성(1996)→국가안전보위부(2010)→국가

47 국가보위성은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모두 담당하고 군에도 영향력을 미치며 비밀경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소련의 KGB와 유사한 정보기구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희원, 『국가정보』 (서울: 법률출판사, 2011), p. 987.

48 서유석 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실태와 북한을 움직이는 사조직 ‘김일성고급당학교 동기모임,’” 『북한』, 제 440호 (2008), p. 156.

보위성(2016)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김일성이 남포의 보안 간부 훈련소를 현지 지도했던 1945년 11월 19일을 창립일로 하고 있다.⁴⁹

국가보위성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노동당 및 국가의 제도 보위를 최우선 임무로 삼고 있다.⁵⁰ 국가보위성은 북한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첨병으로써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⁵¹ 그리고 이를 위해 ①주민들의 사상동향 감시, ②반체제 인물색출, ③정치범수용소(농장) 관리, ④반탐, ⑤해외정보수집·공작, ⑥국경경비·출입국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일성은 국가정치보위부 설립 당시 “국가정치보위부는 당의 한 개 부서이며 나에게 직접 복종한다”고 선언하면서, “종파분자와 계급의 원수는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 씨를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⁵² 김일성의 언급은 국가보위성이 정권과 체제 보위를 위해 설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권력세습의 안정과 공고화를 위한 국가보위성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49 북한이 광복 이후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을 숙청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한 보안 간부 훈련소들은 이후 사법·공안기관, 즉 재판소, 검찰소,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의 전신이 되었다. 이 기관들은 창립일을 전후하여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맹세를 정례화하고 있다. 윤대일,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서울: 월간조선사, 2002), p. 28.

50 국가보위성의 기본임무는 높이 불고 깊이 숨은 간첩 및 반당·반혁명 적대분자들을 적발·숙청함으로써 ‘혁명의 수뇌부’와 당·국가제도를 보위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51 국가보위부가 김정일에게 팩스로 사업정황을 보고하는 날은 매주 목요일이며 국가보위부장은 기타 중요한 사안이나 시급한 문제가 제기되면 임의 시간에 김정일을 방문하였으며, 김정일이 지방을 현지 지도할 때도 동행하였다. 윤대일,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p. 37.

52 Ibid., pp. 31-32.

국가보위성은 정치사찰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치 사상범에 대한 체포·구금·처형 등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 46조는 “반국가 및 반민족적 범죄 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³ 즉, 북한에서 치안유지와 관련된 일반범죄는 사회안전성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북한 체제와 결부된 국가안보 사안은 국가보위성이 담당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가보위성이 적발한 반국가사범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 또는 관리소 처리로 결정·집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특히 김원홍이 2012년 4월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국가안전보위부의 재량이 확대되고, 중앙당의 고위층 인사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결정·집행 사례가 증가하였다.⁵⁴ 김정일의 급사로 인해 충분한 후계수업을 받지 못한 김정은이 취약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국가보위성을 동원한 결과이다.

국가보위성은 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정은의 특별 지시를 받아 업무영역을 노동당 본부와 군 핵심 인물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⁵⁵ 국가보위성은 김정은의 수령과 정권에 대한 보위강화 지시를 빌미로 군부를 포함한 고위층에 대한 휴대전화 도청과 감청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군 보위국에 대해서도 주요 사건의 경우 국가보위성에 보

53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서울: 국가정보원, 2020), p. 363.

54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p. 62.

55 국가보위성의 군부에 대한 감시는 평시에는 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대상이 군부 인사와 연관된 경우에만 김정은에게 별도로 보고하고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고하도록 함으로써 군부와 보위국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⁵⁶ 반면, 국가보위성의 해외정보수집 및 공작업무는 정찰총국의 업무와 일부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위성의 해외 활동은 주로 해외 방첩 및 체제 보위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공작 기능에 주력하고 있어 정찰총국의 해외정보국 기능과는 구분된다.⁵⁷

김정은 시대 들어 국가보위성의 대남공작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탈북자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국가보위성의 대남공작은 최근 탈북자로 가장하고 우리사회에 잠입하는 위장간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원정화, 2010년 김미화, 2012년 이경애가 탈북자로 위장한 국가보위성 소속의 공작원으로 드러났다. 2003년부터 2013년 간 체포된 간첩 49명 중 약 40%가 탈북자로 위장 침투했다는 연구가 있으며⁵⁸, 이를 통해 정찰총국은 물론 국가보위성도 탈북자 공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보위성은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자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송환 활동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다. 국가보위성의 대남정보 활동은 방첩활동의 기초인 수비를 넘어서는 적극적 또는 공세적 방첩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우동측 제1부부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위부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2년 4월부터 당시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었던 김원홍 대장이 부장을 맡도록 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장이었던 이진수가 1986년

사망한 이후부터 2012년 4월 김원홍 부임 이전까지 국가안전보위부장은 공석으로 존재했었다. 김원홍은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된 후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한 선봉에서 있었다. 특히 그는 2013년 12월에 이루어진 장성택의 체포·처형을 주도함으로써 김정은의 신임을 독차지하였다. 김원홍은 2017년 국가보위상에서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이동하였으며, 2017년 말 황병서와 함께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가보위상은 정경택이 맡고 있다. 정경택은 국가보위성 정치국 조직부국장을 거쳐 2017년 김원홍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2020년 5월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상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국가보위상과 함께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나. 조직

국가보위성은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직접 관장하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대외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부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보위성의 군부대 명칭은 첫 숫자를 '1'로 시작하고 있으며, 북한의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조선인민군 제10215 군부대'는 국가보위성의 본부를 의미한다.⁵⁹

국가보위성은 정경택 국가보위상 아래 리정록, 리용암 등 6명의 부상

56 NK지식인연대, 『클로즈업 6월, 북한내부실상』 (서울: 세계북한연구센터, 2015), p. 8.

57 서동규, “김정은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정보·보안기구,”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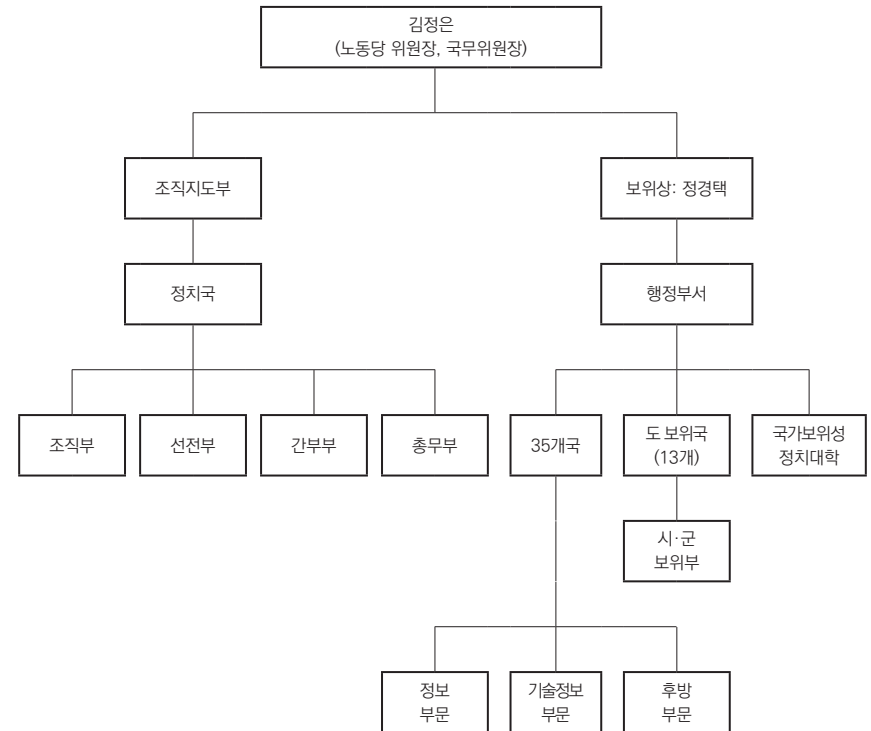
58 김윤영, “위장탈북자 간첩 실태 및 대책,” 『북한학보』 제39집 2호 (2014), p. 18.

59 군부대 명칭을 '1'로 시작하면 국가보위성을 의미하며, '10'으로 시작하면 국가보위성 본부를 의미한다. 북한이 탈주민 인터뷰.

(副相)이 있으며,⁶⁰ 본부는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동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보위성 본부는 정치국과 행정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서는 35개국, 13개 지역보위국,⁶¹ 국가보위성 정치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보위성 정치국은 당 생활지도, 조직, 인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부, 선전부, 간부부, 총무부, 근로단체부, 청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⁶² 조직부는 국가보위성 인원들에 대한 당 조직생활을 지도·통제하는 핵심부서이며, 보위성원들의 혁명화 처벌 권한과 보위성 군인들의 노동당 입당 허가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선전부는 사상교양 사업과 학습총화 등 당 사상생활 지도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부와 지역 보위부들에 산재해 있는 김일성·김정일 연구실 및 동상들을 관리한다. 간부부는 신규 보위원 채용 및 승진과 보위원 후보생 선발 등을 주관하며, 보위원에 대한 인사와 표창 상신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총무부는 보위성의 보안서류를 취급·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국가보위성을 지도·감독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8과를 통해 당 생활 장악·통제를, 검열 2과를 통해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Ⅲ-1〉 국가보위성 조직도



행정부서 35개국은 정보부문, 기술정보부문, 후방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⁶³ 정보부문은 작전종합지도국, 반탐정국, 수사국, 검찰국, 예심국,

60 통일부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에는 국가보위성 부상으로 서대하 중장만 언급되어 있으나, 현재 서대하는 국가보위성 부상에서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부상은 김정은 집권 초기 우동축이 제1부상으로 국가보위부장 역할을 대신하였으나, 2020년 4월 김원홍이 국가보위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임명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0』(서울: 통일부, 2020), p. 50.

61 13개 지역보위국은 ①평양직할시, ②개성특별시, ③나선특별시, ④남포특별시, ⑤평안남도, ⑥평안북도, ⑦황해남도, ⑧황해북도, ⑨함경남도, ⑩함경북도, ⑪자강도, ⑫강원도, ⑬양강도에 있다.

62 국가보위성 정치국 내 주요 조직의 기능에 대해서는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pp. 64-65를 참조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63 유동열은 국가보위성 본부가 28개국, 1총국, 1실 등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예하에 직할시·각 도(12개) 보위성, 시·군·구역에 200여 개 보위부를 두고 리·동 및 노동자구 단위에 보위부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 163; 서유석은 국가보위성 본부를 1국~22국으로, 오항균은 30개국 11개 처 및 21개 지원부서로 보고 있다. 서유석 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실태와 북한을 움직이는 사조직 '김일성 고급당학교 동기모임'』; 오항균, 『김정일시대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pp. 121-122. 국가보위성 본부와 지방조직은 기존연구를 고려하되 필자가 진행한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중앙기관보위국, 보안기관보위국, 원자력총국보위국, 북담대화보위국, 해외대열보위국, 철도보위국, 농장관리국(정치범수용소 관리) 등이다. 기술정보부문은 화학국(도청국), 미행감시국, 무선반탐정국, 자료조사국, 정보기술연구국, 문서검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방부문은 통신국, 후방국, 무역관리국, 차량관리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승용차관리소, 미술창작사, 문예창작사 등 10여 개의 직속 단위가 있다. 국가보위성 행정부서 35개국 중 반탐, 수사, 통신국 등이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 국가보위성의 주요 부서와 기능

부서	기능
작전종합지도국	국가보위성의 본부와 도 보위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종합·지도 업무를 수행, 모든 본부 국과 도 보위국에 지도원 파견
반탐정국	북한 체류 외국인과 해외동포들에 대한 감시·장악, 해외정보기관에 포섭되어 활동하는 첩보원 색출
해외대열보위국	해외 주재 대사관 및 무역대표부,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동향 감시와 소환·구속, 탈북자 관련 공작
북담대화보위국	통일전선부, 조평통, 민경협 등 대남사업기관 인원 감시, 남북회담·행사 진행시 북측 대표들에 대한 감시·조사·구속
수사국	반탐정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업무지도·감독·통제
예심국	반탐정 사건과 발생 사건의 여죄 여부 확인·범중확보·사건 송치 및 구류장 운영·감독
검찰국·재판국	반탐정 사건으로 수사국과 예심국에서 수사 처리한 사건 기소·판결
미행감시국	북한주재 외국인, 해외방문단·대표단·참관단 및 사건 감시대상자들에 대한 미행감시와 요인 사찰 업무 담당
농장감시국	국가보위성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반국가범죄자(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관리

※ 출처: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국가정보연구』 제11권 1호(2018), p. 164 수정·보완.

지역보위국은 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양직할시, 남포·개성·나선 특별시, 9개도 등 13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⁶⁴ 13개 지역보위국 역시 본부의 조직구조처럼 정치부와 행정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서는 7~10개의 처와 시·군·구역 보위부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구역 보위부는 3~5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장, 부부장 2~3명, 과장 3~5명, 부원 30~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최말단인 농촌의 리 단위와 인민반에까지 보위부 요원을 파견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기관 및 기업의 경우 중요도에 따라 보위부 조직의 설치여부가 결정된다. 중요 기관의 경우 보위부 조직과 함께 15~40명 정도가 근무하며, 보위부 조직이 없는 경우 1~3명의 담당 보위원을 파견한다. 국가보위성의 전체 인원은 4~5만 명 정도이며, 보위성 본부에 4,000~5,000명 그리고 지역보위국은 각각 1,500~2,000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국가보위성은 조직 측면에서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국가보위성 특별군사재판소’라는 조직이 새로 등장하였다.⁶⁵ 특별군사재판소는 국가보위성이 장성택 사건에 대해 형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처리하려는 의도에서 임시조직(특별조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국가보위성에는 반국가사범을 판결하는 재판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위성 특별군사재판소의 설립 일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

64 지역보위국의 조직에 대해서는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pp. 63-64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65 북한은 2013년 12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국가보위성에서 열린 특별군사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에 따른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고 밝혔다. 『로동신문』, 2014. 12. 13.

만, 장성택 재판 직전인 2013년 12월경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국가보위성은 김정은 시대 들어 국경경비총국을 예하 부대로 흡수하였다. 국가보위성은 2012년 4월 대량 탈북 문제를 해결하기 인민무력성 소속이었던 국경경비총국을 이관받았으며, 그 결과 국경경비와 탈북자 단속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⁶⁶

셋째, 해외대열보위국을 중심으로 탈북자 관련 정보활동이 증가하였다.⁶⁷ 과거 해외대열보위국은 대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통전부나 작전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 해외대열보위국 중국처를 중심으로 탈북자 색출·송환, 위장 탈북자 양성, 한국인 대상 정보수집·포섭, 탈북자를 활용한 한국 내 반복인사 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창환 선교사 암살, 김정욱 선교사 역류, 김국기·최춘길 유인납치, 한충렬 목사(중국 국적 조선족 목사) 암살 등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⁸ 해외대열보위국은 해외방첩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어 대남 정보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방첩 차원에서 탈북자와 직접 연관된 활동에만 개입하고 있다.

66 광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보고서 (2018), p. 22.

67 해외대열보위국의 탈북자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Ibid., p. 35 참조.

68 “북, 탈북자 재입북 유인 공작 진행,” 『RFA』, 2018. 6. 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defectorreenter-06052018133841.html (검색일: 2010. 10. 1).

2. 사회안전성

가. 연혁과 임무

사회안전성은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김정은 정권을 옹호·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사찰하는 정보기관이자 치안유지 기관이다. 정권과 체제수호를 위해 국가보위성이 비밀경찰로서 은밀히 활동한다면, 사회안전성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 사업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일반경찰 조직이다.⁶⁹ 사회안전성의 구체적 임무는 ①수령 옹호 보위, ②당과 정권 보안사업의 옹호보위, ③인민의 생명·재산 보호, ④사회질서 유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임무 이외에도 일반 경찰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당의 정치사업, 소방사업, 지진관리, 철도·지하철 운영관리, 교화사업, 외화별이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⁷⁰

사회안전성은 소련 군정 시절인 북조선 5도 행정국 산하의 보안국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공식적인 경찰조직의 탄생은 1948년 정권 수립과 함께 출범한 내무성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내무성은 사회안전성(1951.3)→내무성(1952.10)→사회안전성(1962.10)→사회안전부(1972.12)→사회안전성(1998.9)→인민보안성(2000.4)→인민보안부(2010.4)→인민보안성(2016.6)→사회안전성(2020.5)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안전성은 김정은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국민

69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p. 65.

70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 167.

사찰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사회안전성의 주민 사찰 방법은 감시자와 감시대상자 및 통제하는 자와 통제받는 자의 수직적 관계와 모든 주민이 상호 감시 견제하는 수평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물망식 체제이다.⁷¹ 사회안전성은 주민에 대한 사찰과 함께 감시·통제·처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시장 확산과 함께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회안전성의 위상 상승과 역할 확대가 나타났다.⁷²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안전원 역시 생존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시장을 매개로 사회안전원과 주민 간 부패를 연계로 하는 공생관계가 진행되면서 사회통제가 느슨해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상은 2013년 2월 리명수에서 교체된 최부일이 최근까지 맡아왔다. 최부일은 북한군의 요직인 총참모부 작전국장 출신으로 북한군 대장, 당 중앙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국무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3년 3월경 인민보안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개최된 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최부일이 노동당 군정지도부장⁷³으로 이동하면서 후임으로 김정호 상장이 임명되었다. 김정호는 사회안전상으로 임명되기 이전 사회안전성 부상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무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⁷⁴

71 광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p. 17.

72 성준혁,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북한 경찰의 통제 유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73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인민보안부장을 맡았던 최부일은 현재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을 맡고 있다. 군정지도부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군정지도부의 등장으로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은 약화되었다.

74 김정호 사회안전상이 부상으로 강등되었다는 소식도 있으나,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정호 북 사회안전상 부상으로 강등,” 『RFA』, 2020. 9. 1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kw-09152020101642.

사회안전성 요원들의 충원은 당에 대한 충성심과 출신성분에 기준을 두고 있다.⁷⁵ 사회안전성 요원들은 대부분 김정일인민보안대학 졸업생들로서 출신성분 및 사회성분 검증을 위한 신원조회 이후 안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나. 조직

사회안전성은 국가보위성 및 인민무력성과 함께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에 사회안전성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장성택이 맡고 있던 노동당 행정부가 생활지도를 넘어 정책지도까지 담당하였다. 장성택 숙청과 행정부의 폐지 이후에는 조직지도부가 사회안전성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사회안전성 본부는 평양시 서성구역 연못동에 있으며, 노동당 조직인 정치국, 국가보위성 파견조직인 보위부, 행정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서는 본부의 20여 개의 국, 13개 지역의 보안국,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⁷⁶ 사회안전성은 김정호 사회안전상, 리태철 제1부상, 보안·감찰·내부 등을 담당하는 부상들로 구성되어 있다.⁷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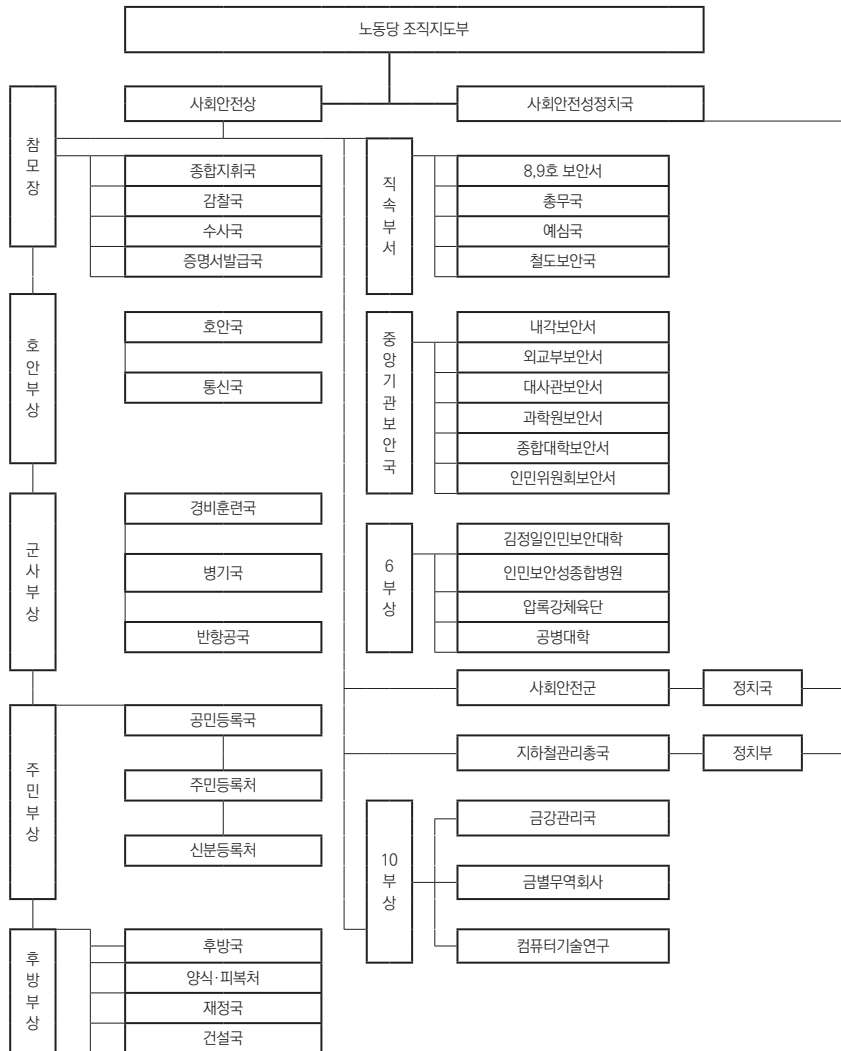
html (검색일: 2020. 10. 11).

75 광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p. 26.

76 사회안전성 조직에 대해서는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김용환, “북한 경찰 (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제5권 2호 (2017), pp. 51-88;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 기구와 국가성』, pp. 65-69;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p. 167-169; 성준혁,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 - 북한경찰의 통제 유형을 중심으로,” pp. 28-43; 광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pp. 14-16 참조.

77 사회안전성 부상은 강영호, 백영철, 최중화, 허용호, 김광현, 김혁, 박종근, 심재복 등이다. 통일부, 『북한 기관별 인명록』, p. 50.

〈그림 Ⅲ-2〉 사회안전성 조직도



※ 출처: 광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p. 16. 수정·보완.

정치국은 사회안전성의 당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정치사업조직으로 조직지도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정치국은 정치국장, 조직·선전 담당 부국장 2명, 조직부, 선전부, 간부부, 총무부, 근로단체사업부, 청년부, 문예창작사, 미술창작사, 출판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국은 이러한 부서들을 통해 보안원의 당생활 지도·감독, 사회안전성의 직무수행 감시·감독, 사회안전성 요원들의 해임·승진·표창 등 인사업무, 보안국·보안서 및 직속기관 정치국(부)의 사업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⁷⁸ 정치국은 사회안전성에 대한 업무감독권과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안전성에서 가장 강력한 부서라고 할 수 있다.⁷⁹

보위부는 국가보위성에서 사회안전성에 파견한 요원들로 구성되는 상주부서로서 국가보위성 본부의 하나의 국 역할을 수행한다. 보위부는 사회안전성과 산하기관 및 보안원에 대한 보위사업을 수행한다.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정치국을 통해 사회안전성의 당 사업·생활에 관한 감독을 한다면, 국가보위성은 보위부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부서는 종합지휘국, 감찰국, 수사국, 예심국, 호안국, 교통국, 반항공국, 경비훈련국, 병기국, 기요변신국, 증명서발급국, 공민등록국, 신분등록국, 통신국, 재정경리후방국, 철도보안국, 교화국, 7총국, 8총국, 지하철도운영관리국 등이 있다.⁸⁰

78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pp. 42-43.

79 성준혁,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 - 북한경찰의 통제 유형을 중심으로』, p. 33.

80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p. 66. 유동열에 따르면 사회안전성 본부의 참모부서는 제1국(감찰국), 제2국(수사국), 제3국(작전국), 제4국(예심국), 제5국(교화국), 제6국(호안국), 제7국(경비훈련국), 제8국(주민등록국), 제9국(통신국), 제10국(병기국), 제11국(재정국), 제12국(후방국), 제13국(건설국), 제14국

사회안전성의 지방조직으로는 특별시·직할시·도 보안국, 시·군·구역 보안서, 동·리의 보안소(분주소) 등이 있다.⁸¹ 보안국은 13개 지역에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의 지방경찰청으로 볼 수 있다. 보안국은 보통 10여 개 정도의 처와 25개 정도의 시(군) 보안서로 구성되며, 군(구역) 보안서는 5개의 과와 5~10개의 리(동) 보안소로 구성된다.⁸²

〈표 Ⅲ-2〉 사회안전성의 주요 부서와 기능

부서	기능
종합지휘국	부서 및 산하 기관의 상황 총괄·지휘
감찰국	보안원 비리적발 및 조사 등의 감찰, 주민 정치사업
수사국	범죄 적발·수사
예심국	넘겨받은 범죄 혐의에 대한 범죄확정
호안국	화재·폭발 등과 관련한 안전 업무, 소방업무
교통국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처리
반항공국	폭격·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소개훈련, 등화관제
경비훈련국	보안원의 군사훈련, 주요시설 및 주요 간부사택 경비

(자재관리국), 제15국(금강관리국), 종합지휘실(상황실), 총무국, 산업감찰국, 대외 사업국 등이 있다. 또한, 참모 부서 소속의 독립처로는 제1처(외사처), 제2처(교육처), 제3처(운수처), 제4처(군의처), 제5처(반항공처), 제6처(경리처), 11처(상표인쇄처) 등이 있으며, 사회안전성 본부 산하의 독립부서로는 철도안전국, 지하철도관리국, 7총국(공병총국), 8총국(도로총국), 국토총국 등이 있다. 사회안전성 본부 산하 직할부서로 인민보안부 정치대학, 공병대학, 압록강체육단, 사격단, 화폐공장, 권총공장, 심사소, 검차대, 자동차수리소, 인민보안부 병원, 116기동대, 답사관리소, 기요연락소, 전자계산기연구소, 지진연구소, 경비대 등이 있다.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p. 167-168.

81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방조직 명칭도 사회안전국(특별시·직할시·도)과 사회안전부(시·군·구역)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2 사회안전성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부서	기능
병기국	무기와 탄약의 보관·관리·검열, 사격장 및 훈련장 관리
기요변신국	주요 문건 보관·관리, 암호 전보문 해석·전파
증명서발급국	여행·출장 증명서 발급
공민등록국	의뢰받은 신원확인, 신분 변동 등록, 주민대장 정리
신분등록국	주민의 출생·사망·결혼·이혼·거주이전 정리, 공민증 발급
통신국	유·무선 통신
재정경리후방국	보안성 예산 편성·집행, 생활비·의복·식량·자재 공급·관리
철도보안국	철도안전, 여행질서 단속
교회국	범죄자 수용관리, 교회소 운영
7총국(공병총국)	국가 주요 시설 건설
8총국(도로총국)	고속도로 및 교량 건설
지하철도운영관리국	평양시 지하철 관리 및 운영, 지하철 내 안전업무
중앙기관안전부	노동당과 내각 등 주요부서 간부·직원 보안사업

※ 출처: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pp. 66-67 수정·보완.

보안국은 국장, 참모장, 부국장 4명, 정치부장을 두고 있으며, 행정부서로 종합지휘처, 감찰처, 수사처, 예심처, 호안처, 교통처, 반항공처, 경비훈련처, 기요변신처, 증명서발급처, 공민등록처, 신분등록처, 통신처, 재정경리후방처 등이 있다.⁸³ 그리고 산하 조직으로 특별기동대, 정치학교, 화학대, 기요연락대, 여행자단속집결소, 비법월경집결소, 무선통신결속소 등을 가지고 있다.

83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p. 68.

보안서는 우리의 경찰서에 해당하며 시·군·구역에 200여 개가 있다. 그리고 보안소는 우리의 파출소로 볼 수 있으며 전국 리·동 단위와 공장 기업소에 4,000여 개가 있다.⁸⁴ 분주소는 20~3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소장, 부소장 2명, 담당보안원과 주민등록 담당 등 7~10명의 보안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리·동에 보안소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 규모에 따라 2개 동에 하나의 보안소가 설립되어 있기도 하다.

기관·기업소 보안부는 공장 종업원의 출퇴근 사항 파악과 공장 내 범죄행위 및 사건·사고를 담당하고 있다. 기관·기업소 보안부는 기관과 기업소의 중요성과 인원 규모에 따라 보안원 2~3명이 맡고 있거나 별도의 보안부 기구가 설치되기도 한다. 보안부 기구를 설치할 때는 구역보안서의 기구체계 및 인원 규모와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사회안전성 요원의 인원 규모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18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사회안전원 8만여 명, 사회안전군 소속인 7총국·8총국의 공병요원 8만여 명과 경비훈련국 경비요원 2만여 명 등이다. 특히 사회안전원은 아니지만 사회안전성과 산하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민(노동자)이 12만여 명으로 이를 포함하면 실제 총인원 규모는 3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⁸⁵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사회안전성의 조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사회안전성 요원을 양성하는 우리의 경찰대학과 유

사한 인민보안대학을 2012년 10월 5일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⁸⁶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일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대학이며, 1990년대 대남 공작원 양성교육기관인 김정일정치대학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이다.⁸⁷ 대학 명칭으로 김정일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김정일 시대에 인민보안부를 신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⁸⁸ 김정은 역시 사회통제를 위해 인민보안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2012년 초 인민보안성의 보안부부장 직제를 폐지하고 참모장 직제를 재도입하였다. 참모장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 사망 등으로 체제 위기가 증가하자 사회안전부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면서 도입한 직제이다. 그러나 북한은 참모장 직제를 2000년에 4월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폐지하고 보안부부장 직제로 대체하였다. 그 후 내각 소속이었던 인민보안성은 2010년 4월 국방위원회 산하 기구로 이동하면서 인민보안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인민보안성에 군율 제도를 수립하려는 김정일의 의지에 따라 참모장 제도를 재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⁸⁹

84 최응렬·이규하, “북한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에 대한 연구,” p. 198.

85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p. 165-166. 전현준은 사회안전성의 인원을 사회안전원 8만여 명, 사회안전군 13만여 명, 사민 7만여 명 등 28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현준, 『북한의 사회 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p. 33.

86 『조선중앙방송』, 2012. 10. 6.

87 광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p. 26

88 성준혁,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 - 북한경찰의 통제 유형을 중심으로,” p. 123.

89 광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p. 28.

3. 보위국

가. 연혁과 임무

보위국은 군대 내 간첩, 불순분자, 사상적 동요자 색출뿐만 아니라 살인, 절도, 무단 탈영, 성폭행 등 모든 군사 범죄에 대한 수사·예심·처벌을 집행하는 북한군의 정보기관으로서 우리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위국의 구체적 임무는 ①군부대 내 반당·반혁명·반국가 행위자들의 색출·검거, ②능동적·독자적 방첩임무, ③최고지도자의 군부대 현지도 시 경호, ④군대의 주민등록 사업, ⑤일반 범죄자들의 색출·처리 등이다.⁹⁰

보위국은 1948년 2월 8일 인민군 창설 초기 반탐조직으로 만들어진 안전기관에 기원을 두고 있다.⁹¹ 당시 북한은 이 기관에 내무성 특수정보처 요원들로 안전군관(장교)을 파견하고 정치국(당시 문화부)의 소속으로 배속시켜 정치사찰 및 반탐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⁹² 한국전쟁 기간에는 인민군 내의 간첩과 반당·반혁명 분자 색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전쟁 이후에는 군대 내에 정치안전군관을 대폭 증원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갔다.

보위국이 현재와 같은 독립부서로 등장한 것은 1968년 정치안전국의

출범으로 볼 수 있다. 정치안전국의 출범은 1956년과 1968년의 군사쿠데타 적발로 인한 김창봉·허봉학 등의 숙청에 대한 공로와 연관되어 있으며,⁹³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군부 내에서 실현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정치안전국은 1970년대 초에 보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95년 10월에는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인 보위사령부로 확대·개편되었다.⁹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2016년에 보위사령부를 보위국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이 보위사령부를 보위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김정은 시대의 ‘선당정치’로 변화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노동당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당-국가체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상국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위사령부의 보위국으로의 명칭 변경은 위상 하락보다는 군부의 조직 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⁹⁵

과거 보위사령부는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와 맞물려 권한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감시와 통제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등 다른 정보기관의 활동까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인 2011년 5월경에는 노동당 39호실과 김정일 직속의 능라 888 무역회사

90 최주환, “북한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체계 및 활동,”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1997), pp. 47-48; 오항균, “김정일시대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p. 134.

91 “북한군 보위사령부 베일을 벗긴다,” 『시사저널』 1620호 (1997),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32> (검색일: 2020. 10. 10).

92 오항균, “김정일시대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p. 133.

93 Ibid., p. 134.

94 보위사령부로의 확대·개편은 1992년 구소련 프룬제 군사대학 사건과 1995년 6군단 사건을 적발한 공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95 “北 “군 보위국장 조경철”...보위사령부 격하? 아닌 듯,” 『NewDaily』, 2016. 3. 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3/21/2016032100041.html> (검색일: 2020. 5. 12).

를 감찰하였으며, 당시 군 기관이 당의 외화벌이 부서들을 감찰하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⁹⁶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보위국은 인민무력상,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등 군부 내 주요 간부와 군사지휘관 및 정치군인들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전화 도청·감청, 미행 등을 시행하였다.⁹⁷

김정은 시대의 보위국장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김원홍이 보위사령관직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 9월에 그 후임으로 조경철 대장이 임명되어 현재까지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보위국은 정치부와 행정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부서는 11개 정도의 부서와 교육과,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⁹⁸ 그리고 군단에는 보위부와 보위 중대, 사단에는 보위부와 보위 소대가 있으며, 연대와 대대는 각각 보위부장과 보위 지도원이 비밀정보원과 함께 군대 내 보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⁹⁹ 보위국은 국장으로 대장 1명, 부국장으로 상장 4명, 각 처장으로 중장들이 있다. 그리고 보위국 정치부장은 상장 계급으로 보위국장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96 박형중, “김정은 권력 정착과정에서의 군부 동향,” 『Online Series』 CO 13-23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3.

97 오경섭, 『정치엘리트 응집력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성남: 세종연구소, 2013), p. 32.

98 보위국 조직에 대해서는 최주환, “북한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체계 및 활동,” pp. 45-62;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서울: 한울, 2003), p. 175; 전성병 외,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군사평론』 408호 (2010), pp. 319-345; 오항균, “김정일시대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pp. 135-136; 광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pp. 24-25 참조.

99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p. 175.

정치부는 보위국 안에 있는 행정부서들, 간부처 부서들, 보위사령부 직속부대들에 대한 당 조직·사상생활을 지도·관리한다. 군대 내에서 총정치국은 정치군관과 당 일꾼 등을 통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감시·통제를 담당하는 반면, 보위국은 비공개적으로 비밀정보적 차원에서 감시와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¹⁰⁰

〈표 III-3〉 보위국의 주요 부서와 기능

부서	기능
종합처	각 군단 사령부 보위부들의 보고를 종합하고 지시
수사처	반 국가사건을 비롯한 군대 내 발생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
예심처	각 군단 보위부들에서 미결로 처리된 예심 사건을 담당
감찰처	군대 내 살인사건과 각종 비리사건을 조사
사건종합처	각 부서들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
미행처	사건 용의자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도청·감시·미행
기술처	각종 도감청 장치의 개발과 음성분석을 비롯한 기술분석 담당
공장담당처	인민무력성 예하 군수공장들에 대한 보안 및 경비 담당
특수기관담당처	일반군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기관들에 대한 담당
주민등록처	군관가족들에 대한 주민등록과 신상정보 파악
해외담당처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담당

※ 출처: 이영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교보 eBook (파주: 살림, 2012), p. 62.

100 오항균, “김정일시대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p. 136.

행정부서는 종합처, 수사처, 예심처, 미행처, 사건종합처 등 11개 정도의 부서가 있다.¹⁰¹ 종합처는 보위사령부 계획작성, 총화사업, 군사훈련 조직 등과 함께 행정업무 전반을 지도·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군단 보위부를 지휘통제하고 있으며, 각 군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일차적 보고를 접수·종합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심부 등 다른 부서에 인계한다. 수사처는 간첩, 반당·반혁명 분자들을 비롯한 사상범과 정치범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예심처는 범죄자들에 대한 심문을 전담하고, 감찰처는 탈영, 살인, 국가·군수물자의 절취·횡령 등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사건종합처는 수사처, 예심처, 감찰처, 미행처 등에서 제기된 사건을 분석·평가한다. 미행처는 범죄자들을 비밀리에 감시하면서 추적과 잠복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기술처는 소장급 이상 장성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설치된 전화를 도청하며, 외국 군사대표단원들이 숙박하는 초대소 및 호텔 방에 대한 도청도 시행한다. 공장담당부·특수기관 담당처는 인민무력성 소속의 공장들과 특수기관을 담당하며, 주민등록처는 군관과 가족들에 대한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담당처는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인민군 기관의 장교와 장성들을 감시·사찰한다. 교육과는 보위장교들을 교육·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자료실은 외부에서 반입된 서적과 자료 그리고 보위국 내부문서들을 보관·열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01 보위국 행정부서에 대해서는 오항균, “김정일시대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pp. 135-136; 광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pp. 24-25 참조. 유동열은 1처(종합처), 2처(군대열사업 담당), 3처(국내반탐), 4처(도청), 5처(수사처), 6처(미행처), 7처(해외반탐처), 8처(예심처), 14처(감찰), 15처(특별검사처), 16처(국경담당), 17처(평양시 보위사업) 등으로 보고 있다.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 170.

IV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해외 정보기구

1. 정찰총국
2. 통일전선부
3. 문화교류국

1. 정찰총국

가. 연혁과 임무

정찰총국¹⁰²은 대남·해외 정보기관으로 군사첩보 수집, 요인암살, 테러, 무장간첩 남파, 중요 전략 시설물 파괴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CIA와 유사하다. 정찰총국은 무기 수출, 마약 제조 및 거래, 위조지폐 등 불법행위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우리의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과 함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2월 국방위원회 산하에 정찰총국을 신설하고 노동당의 작전부와 35호실, 군 총참모부의 정찰국과 총정치국의 6·15국을 통합하였다. 정찰총국은 총참모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총참모장이 아닌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직접 지휘를 받는 독립부서로 볼 수 있다. 통일전선부가 대화와 협상 등 정치공작을 위주로 하는 대남·해외사업 부서라면 정찰총국은 물리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찰총국은 설립 이후 천안함 폭침(2010.3), 연평도 포격(2010.11), 디도스 공격(2009.7, 2011.3), 황장엽 암살 시도(2010.4, 10), 농협 전산망 해킹(2011.4), GPS 교란(2012.4~5.13) 등 크고 작은 대남도발을 주도하였으며,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 역

102 정찰총국에 대해서는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pp. 465-468의 내용을 수정·보완.

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볼 수 있다.¹⁰³

정찰총국장은 초대 김영철(2009~2015)에 이어 장길성(2016~2019) 그리고 현재는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립광일 중장이 맡고 있다. 립광일은 지난 2016년 1월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을 맡았던 인물로 2019년 12월 개최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장 진급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했다.¹⁰⁴

나. 조직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남·해외 정보활동의 핵심 기관으로 본부는 평양시 형제산 구역에 있으며, 예하 부대는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다.¹⁰⁵ 정찰총국은 간첩침투와 양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육·해상정찰국(1국), 테러, 납치, 폭파 등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종합분석국(2국), 사이버테러와 공작 장비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정찰국(3국), 대남·해외정보를 수집하는 해외정보국(4국), 대남 군사회담을 담당하는 대적협상국(6국), 보급지원을 담당하는 후방지원국(7국) 등 모두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⁶

정찰총국 산하 부서들의 구체적 임무와 조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103 “김정남 암살에 北정찰총국 19과 최순호 과장이 중심역할,” 『연합뉴스』, 2017. 2. 24, <https://m.yna.co.kr/view/AKR20170224188400073> (검색일: 2017.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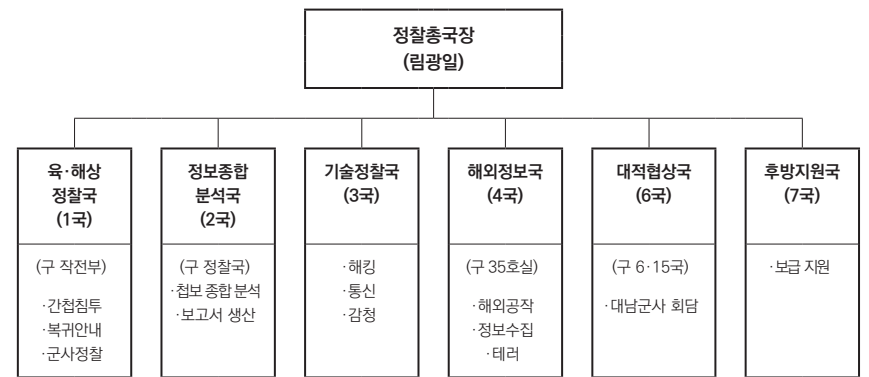
104 립광일의 임명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전후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에 발간된 통일부의 『북한 기관별 인명록』에서도 립광일을 정찰총국장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북한 기관별 인명록』, p. 274.

105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 173.

106 정찰총국의 각국에 붙이는 1, 2, 3국 등 호칭은 정보기구의 속성상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핵심부서들은 과거 부서인 작전부, 35호실, 정찰국, 6·15국의 정보활동 임무 및 역할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 정찰총국 조직도



※ 출처: “[Why] 조선노동당 ‘문화교류국’… 호칭은 선생, 본업은 암살·테러,” 『조선일보』, 2017. 2. 25, 수정·보완.

(1) 육·해상정찰국

육·해상정찰국(구 작전부)은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 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안내·복귀, 대남 테러공작 및 대남 침투루트 개척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주요 군사기지와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전투적 임무도 필요에 따라 부여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이 악화된 이후로는 공작자금 마련을 위해 무기거래, 위조화폐, 마약거래 등을 통해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 초 노동당 조사부를 설립·운영하였으며, 1980년대

조사부를 대외정보조사부와 작전부로 분리하였고, 작전부는 2009년 2월 정찰총국으로 통합되었다. 노동당의 작전부는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1989년 이후 20여 년 동안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남공작 활동을 총괄해 왔다.

육·해상정찰국은 남파 공작원과 전투원(간첩안내원 및 공작선요원) 양성소로 '김정일정치군사대학'¹⁰⁷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남파 공작원과 호송 전투원들에 대한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육·해상정찰국 인원은 5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육상처, 해상처, 지원본부 등 3개 부서로 편제돼 있다.¹⁰⁸ 그리고 남파 공작원 파견기지로써 2개의 육상연락소(개성, 사리원)와 4개의 해상 연락소(남포, 해주, 청진, 원산)를 운영하고 있다.¹⁰⁹ 개성연락소는 중부와 서부지역, 사리원연락소는 중부와 동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남포연락소는 목포해역과 거제~제주해역, 해주연락소는 서해 군사분계선과 목포 이북해역, 청진연락소는 일본, 원산연락소는 동해와 군사분계선 이남 및 남해의 가덕도 해안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본부에는 공작원, 전투원들과의 교신을 담당하는 통신 연락소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50여 곳에 고정식 및 이동식 송수신소가 배치돼 있다. 우리의 암호해독을 위한 전문연구실도 있으며, 해상침투 수단으로는 유고급 잠수함, 반 잠수정, 상어급 잠수함을 사용하며 때로는 어선으

로 가장한 선박이 이용하기도 한다.¹¹⁰

육·해상정찰국은 공작원을 비무장지대(DMZ)나 해안선을 통해 남한으로 직접 침투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어 북한의 여러 정보기관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다. 육·해상정찰국의 과거 주요활동은 속초 잠수정 침투(1998.6), 동해시 해안 무장간첩 사체(1998.7), 여수 해안 반잠수정 침투(1998.12)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을 일으킨 김현희를 비롯한 많은 공작원이 육·해상정찰국 소속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정보종합분석국

정보종합분석국(구 정찰국)은 무장공비 양성·남파, 요인암살, 파괴·납치, 게릴라 활동, 군사정찰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과거 정찰국은 총참모부 소속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관장하에 거의 독자적으로 남한의 군사정보 수집과 정찰활동을 담당해 왔으며, 남한 정부 내 요인암살 및 주요 군사기지와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정보종합분석국은 7개의 정찰대대¹¹¹와 정치부, 계획부, 특수정찰부,

107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은 1962년 '금성정치군사대학'으로 출발하여 1983년 노동당 작전부에 흡수되었으며, 김정일의 50회 생일을 앞둔 1992년 1월 '김정일정치군사대학'으로 개칭되었다.

108 김광진, "북한의 대남테러 조직 및 테러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스라엘 국제대테러연구소 공동 국제학술 회의자료집 (2016), p. 77.

109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2002』 (서울: 북한연구소, 2003), p. 972; 최준택, "북한의 정보기구," p. 463.

110 김광진, "북한의 대남테러 조직 및 테러전망," p. 77. 황장엽도 작전부(현 육·해상정찰국)가 잠수정을 비롯하여 테러와 파괴 그리고 암해활동에 필요한 최신 기술 장비와 상당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1999), p. 314.

111 과거 정찰국은 직속부대로 도보정찰 대대와 해상정찰 대대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참모부 산하의 경보병 사단에 특수전 병력 20만여 명을 운용하였다. 국방부, 『국방백서 2010』 (서울: 국방부, 2010), p. 24.

통신부 등을 두고 있으며, 4,5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¹¹² 그리고 전방과 동·서해안에 3개의 파견기지, 22전대, 첩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198연락소, 간첩들에 대한 이남화 교육을 맡은 907부대, 게릴라 전투원을 양성하는 마동희군사대학(전신 압록강대학) 등도 운영하고 있다. 각 군단과 사단들에도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찰대대들이 있으며, 이들은 휴전선 지역의 군사동향 및 남한 후방의 산업시설, 비행장, 항만 등 전략목표들에 대한 정찰자료,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대간첩 작전능력과 통신체계의 취약점 관련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필요시 무장공비 납파, 요인암살, 납치, 폭파, 테러임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락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종합분석국의 과거 주요 대남 공작활동은 124 군부대 청와대 기습사건(1968.1), 울진-삼척지역에서의 무장 게릴라 침투사건(1968.10), 미얀마(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1983.10),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1996.9)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10년 탈북자로 위장하여 황장엽 암살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공작원도 이 부서 소속이다.

(3) 기술정찰국

기술정찰국은 사이버테러, 해커양성, 암호통신 분석, 통신감청, 침투장비 및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정찰국은 산하에 해킹을 전담하는 ‘110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31소(해킹 프로그램 개발), 32소(군

112 정보종합분석국의 조직에 대해서는 김광진, “북한의 대남테러 조직 및 테러전망,” pp. 77-78 참조.

관련 프로그램 개발), 56소(지휘통신프로그램 개발) 등을 운영하고 있다.¹¹³ ‘110연구소’는 121소(일명 기술정찰조)와 100연구소가 통합된 부서로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한국, 미국 등에 대한 전략정보 수집, 댓글 공작 등 사이버심리전, 디도스 공격, 사이버테러 등을 전담하고 있다.¹¹⁴

북한의 주요 해킹조직들은 기술정찰국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¹¹⁵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¹¹⁶, ‘블루노로프(Bluenoroff)’¹¹⁷, ‘안다리엘(Andariel)’¹¹⁸로 칭해온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하면서, “이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이자 북한의 중요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¹¹⁹

기술국 요원들은 사이버공작 전문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¹²⁰,

113 Ibid., p. 78.

114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p. 174.

115 “美재무부, 북미실무협상 재개 전망 속 北 해킹그룹 3곳 제재,” 『연합뉴스』, 2019. 9. 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3039153071> (검색일: 2019. 9. 20).

116 라자루스 그룹은 2007년 초 조직되어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姆 랜섬웨어 공격 등을 수행했다. 산하조직으로 미로천리마(APT37), 침묵천리마, 별뿔천리마, 물수제비 천리마 등이 있다. “北 해킹 전사들의 조직명은 ‘천리마’...하부조직 주특기 명확,” 『중앙일보』, 2018. 2. 21, <https://news.joins.com/article/22385751> (검색일: 2019. 8. 10).

117 블루노로프는 2014년 초 포착되었으며, 외국 금융기관 공격을 통한 불법적 수입 확보를 통해 부분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에서 11억 달러 탈취를 시도했고 방글라데시와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대만 등 11개국 16개 기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118 안다리엘은 2015년 포착되었으며, 한국 정부와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119 이들 3대 해킹그룹은 2017년 1월~2018년 9월 사이에 5개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5억 7천 10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美, 北 3대 해킹그룹 정조준...적나라한 해킹실態·정체 드러나,” 『연합뉴스』, 2019. 9. 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4003600072> (검색일: 2019. 9. 30).

120 총참모부 소속으로 1986년 5년제 전산과정을 신설하여 매년 1,000여 명의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평양 만경대 구역에 있다.

지휘자동화대학(일명 미림대학, 현 김일정치군사대학)¹²¹, 모란봉대학¹²² 등을 졸업하고 사이버 전사로 활동하게 된다.

기술정찰국에 의한 대남 사이버공격 활동은 2009년 7월 7일의 디도스(DDos) 공격을 시작으로 디도스 공격(2011), 농협 전산망 해킹(2011),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2011), 중앙일보 전산망 해킹(2012), 2012년 3월과 2013년 3월~6월에 이어진 사이버공격 등이 있다. 그리고 2014년 11월의 미국 소니픽쳐스사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12월의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소 설계도 유출 해킹사건도 기술정찰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해외정보국

해외정보국(구 35호실)은 주로 해외에서 주재국의 대남 관련 정보수집과 남한에 대한 우회 침투와 요인 납치 및 테러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해외정보기관이다. 이 기관의 요원들은 해외에서 대사관 직원이나 태권도 사범, 무역상사원, 학술교류 요원 등의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주재국의 대남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남한에 대한 우회 침투와 테러공작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특성 때문에 35호실은 2009

121 김정일 지시로 1986년 평양 미림동에 설립되어 일명 '미림대학'의 별칭으로 불려지다가, 2000년 '조선인민군 지휘자동화대학'에서 '김일정치군사대학'(조선인민군 144부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본과정인 학부는 5년제로 매년 12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대학원에 해당하는 연구과정은 3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지도국인 '121국' 등에 배치된다.

122 정찰총국 소속으로 1997년 당 작전부에 신설되었으며 전산정보처리, 암호해독, 해킹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이버공작 양성부서이다. 학제는 5년제이며 매년 3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입학 당시부터 인민군 '중위' 계급을 부여하고 있다.

년 정찰총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통일전선부·작전부·대외연락부 등 3개의 노동당 대남공작부서가 모여 있던 3호 청사 내에 있지 않고 노동당 본부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1960년대 초 노동당 조사부로 출발한 35호실은 1980년대 들어 대외정보조사부와 작전부로 분리되었고 그 후 대외정보조사부는 다시 35호실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2009년 2월 정찰총국 신설과 함께 흡수되어 해외정보국으로 개칭되었다. 노동당 35호실은 조사부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대외·대남사업 부서이지만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직접지도를 받는 기구로서 과거 노동당 대남부서들의 사업을 검증·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했다.¹²³

현재까지 해외정보국의 기구 편제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부서로서는 남조선과, 미국과, 일본과, 아시아과, 작전과 등 7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활동 거점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마카오, 홍콩, 중국의 선양·엔지·상하이와 태국 방콕 등이다. 해외정보국은 유럽의 프랑스 파리와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정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대미 정보활동을 위해 라틴 아메리카에 해외정보국 요원들을 파견하고 있다.¹²⁴

해외정보국의 활동으로는 1978년 최은희·신상옥 납치, 1987년 8월 KAL 858기 공중 폭파, 2006년 7월 방글라데시→태국→필리핀인 등으로 국적세탁을 하며 입국했다가 체포된 '무하마드 간수'로 유명한 간첩

123 김정민, "북한노동당 35호실, 무엇을 하는 곳인가?," 『북한』, 제341호 (2000), p. 80.

124 김광진, "북한의 대남테러 조직 및 테러전망," p. 78.

정경학(정수일), 2009년 적발된 간첩 이병진 등이 있다. 특히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도 해외정보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¹²⁵

(5) 대적협상국

대적협상국(구 6·15국)은 2000년 6·15 선언 이후 남북 군사회담에 대비해 만든 총정치국 산하 ‘6·15국’을 흡수·통합한 조직이다. 6·15국은 대남 군사정책 및 군사회담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대남 군사 관련 담화 및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를 활용하였다. 현재 대적협상국은 남북 군사 대화 관련 협상 기술개발 및 회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통일전선부

가. 연혁과 임무

통일전선부¹²⁶는 남북회담,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

선 사업 등 대남전략 및 전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남부서이자, 대외적으로는 통일외교기관의 역할을 하는 노동당의 대남·해외 정보기관이다.

통일전선부는 1956년 문화부로 출범한 이후 문화연락부(1974.5)→문화부(1974.10)→문화부 폐지(1975.11)를 거쳐 1977년 10월에 등장하였다.¹²⁷ 통일전선부의 모태인 문화부는 1956년 대남 선전·선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당의 부서로 신설되었다. 문화부는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기 위해 방송·전단 등의 제작·살포,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대한 지도, 남한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등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부서 명칭과 관련하여 문화부와 대남선전부를 놓고 경합이 있었으나 김일성이 문화부로 결정했다.¹²⁸ 출범 초기 문화부는 남조선연주소, 대남방송총국,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방송대학 등 대남 연구기관들과 선전기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은 1974년 5월에 문화부와 연락부를 통합하여 문화연락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남사업담당 비서였던 김중린 문화연락부장의 독선적 업무처리로 인해 동년 10월 다시 문화부와 연락부로 분리되었다.¹²⁹ 그러나 이후 김정일의 후계구축과정에서 문화부는 폐지의 길을 걷게 된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은 1975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대남부서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다. 검열 결과 동년 11월

125 김정남 암살은 정찰총국 해외정보국(암살시행), 국가보위성 말레이시아 파견요원(출입국 관리 등), 외무성 말레이시아 대사관(현지 편의제공 등) 등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126 통일전선부 출신의 장철현은 통일전선부의 정확한 명칭은 통일전선사업부이며, 통일전선부는 약칭으로 보고 있다. 대외연락부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p. 78;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제』, p. 207. 그러나 필자는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통일전선부라고 호칭하고 있어 이를 따르고 있다.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20. 6. 5.

127 문화부에서 통일전선부의 창설까지의 연혁에 대해서는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제』, pp. 207-209 참조.

128 유영구, 『남북을 오고 간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글, 1993), p. 188.

129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제』, p. 208.

노동당의 대남조직과 지도체계를 개편하고 대남부서 책임자들을 김정일 측근으로 교체하면서 문화부를 폐지하고 연구소로 전환시켰다. 김정일은 문화부의 대남 연구사업 분야는 따로 분리하여 남조선연구소의 명칭을 달아 업무를 전환시켰으며, 기존의 남조선연구소는 강남문화사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문화부에서 관장하던 조총련 및 해외동포들과의 사업 부분은 국제부로 이관하였으며, 남북대화 등의 업무는 외교부가 그리고 우회공작 등 대남공작과 관련된 일부 업무는 연락부가 담당하였다.

북한의 정보기구에서 사라졌던 문화부가 통일전선부의 명칭으로 다시 부활한 시점은 1977년 10월이다. 김정일은 이 시점에 남북회담 및 통일전선 공작 임무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를 신설하였으며, 과거 문화부를 해체할 때 노동당 국제부와 연락부에 이관했던 업무를 다시 복원시켰다. 그리고 남조선연구소의 기능을 통일전선부에서 다시 흡수하도록 하고 기존에 남조선연구소였다가 강남문화사로 개칭했던 것을 다시 남조선연구소 명칭으로 환원시켰다.

통일전선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교류가 확대되면서 공개적인 대남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의 특성으로 다른 대남기관들에 비해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2009년 정보기구 개편과 더불어 국방위원회의 정찰총국 신설로 대남 정보기구가 통폐합되면서 그 위상과 역할이 약화·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첫 통일전선부 부장은 김양건으로 2006년 임동옥 사망 이후 부장에 임명되었으며, 2015년 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 후임으로는 당시 정찰총국장이던 김영철이 통일전선부 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영철은 2016~2019.3월까지 통일전선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그 후임인 장금철이 현재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있다.

북한의 대남 정보기관 중에서 통일전선부 요원들만이 다른 기관의 요원들과는 달리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활동하고 있다. 통일전선부장을 포함하여 과거 남북대화·교류 협력에 자주 등장한 김용순, 박영수, 원동연, 전금철(본명: 전금진), 안병수(본명: 안경호), 이종혁 등이 통일전선부 간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¹³⁰

나. 조직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19개 전문부서¹³¹ 중 하나로, 통일전선 공작과 남북대화·교류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이다. 통일전선부 청사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있다. 통일전선부는 부장 밑에 정책, 교류, 회담, 연고자, 조총련, 조직 등의 담당부서와 부부장을 두고 있다. 통일전선부 부장은 장금철, 부부장으로서는 김인삼, 리택건, 맹경일, 원동연, 정송준, 한희철 등이 알려져 있다.¹³²

통일전선부 산하 부서들로는 대남정책을 생산·기획하는 정책과·대남과, 남북·해외 교류를 지도·관리하는 교류 1·2과, 남북 당국 및 민간대화를 담당하는 회담 1·2과, 남한·해외교포 중에서 북한에 연고가 있는

130 강원준, 『국가정보의 이해: 국가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pp. 290-291; 최준택, “북한의 정보기구,” p. 206.

131 “북한권력기구도,”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heme/getPowerStructure-Dang.do> (검색일: 2020. 9. 21).

132 통일부, 『북한 기관별 인명록』, p. 17.

반면, 조평통위원회는 1961년 5월 13일 결성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당의 통일·대화노선 관철과 정책수행 및 통일전선 형성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은 4·19혁명 직후 우리사회에서 통일논의가 분출되자 이를 대남혁명전략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내부의 정당·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을 망라하여 조평통위원회를 설립하고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표방하였다.¹³⁶ 조평통위원회는 국내인사와 해외동포 대상의 통일전선 형성, 우리사회 내부의 친북여론 조성을 위한 선전공세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요 사건·사고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¹³⁷

국가기구 이전의 조평통위원회는 산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통일전선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조평통위원회가 통일전선부 산하의 당 외곽단체에서 국가기구로 승격되면서 조평통서기국을 흡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평통서기국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조평통위원회의 국가기구 승격은 과거 장관급 회담이 ‘격’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⁸ 조평통위원회는 국가기구 승격에도 불구하고 통일전선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일전선부는 산하에 조국통일연구원(남조선연구소)과 해외동포영접총국을 두고 있으며, 공개적인 대남사업을 위한 외곽단체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민족화해협의회 등을 두고 있다.¹³⁹ 그리고 2005년 ‘우리민족끼리’가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밝혀졌으며, 2008년 최종화씨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통일전선부의 전위조직이라고 밝히는 등 통일전선부의 산하 조직들이 새롭게 드러났다.¹⁴⁰

조국통일연구원은 1959년 12월 노동당 문화부 산하 남조선연구소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1978년 1월경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으로 흡수되었으며, 1989년에 조국통일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원장과 부원장 산하에 종합정세연구실과 종합편집실을 두고 있으며, 남한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과 관련한 대남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정책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교포들을 대상으로 격주간지인 『남조선문제 연구』를 발행하고 있다.¹⁴¹ 조국통일연구원은 대남정책 연구를 위해 북한에서 가장 큰 남한 자료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¹⁴²

136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각계 각종 애국적 민주주의력량을 단합하여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여 조직된 사회단체”이다.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773.

137 통일부,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9), p. 462.

138 남북은 2013년 고위급 당국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수석대표 ‘격’ 논란 속에 회담을 무산시켰다. 당시 북한은 수석대표로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제안하였으며, 우리는 ‘조평통 서기국장은 장관급이 아니다’라면서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임명하여 회담이 무산되었다. “북 ‘조평통’ 국가기구화...남 통일부와 ‘격’ 맞추기,” 『한겨레』, 2016. 6. 30,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0462.html> (검색일: 2020. 9. 21).

139 통일전선부의 조직에 대해서는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pp. 88-98; 통일부, 『2009 북한개요』, pp. 462-464;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pp. 313-314;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pp. 468-469 참조.

140 최준택, “북한의 정보기구,” p. 453.

141 통일부, 『2009 북한개요』, p. 463.

142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p. 9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 조국전선)은 노동당의 통일노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는 당의 전위기구이며, 1949년 6월 25일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72개 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하여 결성되었다.¹⁴³ 북한은 이 기구의 성격을 “로동동맹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의 력량을 묶어 세운 정치조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전선은 남한에서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명·담화·기자회견 형식 등을 빌려 대남선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남한 내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¹⁴⁴

반제민족전선(약칭 반제민전)은 과거 우리사회 내부에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한 통일혁명당(1969.8.25 창당)의 후신이다.¹⁴⁵ 북한은 통일혁명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1985.7.27)을 변경하였으며, 통혁당의 목소리방송 역시 구국의 소리방송(1985.8.8)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5년 3월에는 한민전을 다시 반제민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반제민전은 구국의 소리방송을 활용하여 우리사회 내부의 좌익세력을 지도해왔으며, 우리사회의 주요사건과 남북관계 현안 발생 시 담화·선언문·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한편 북한은 2013년 8월 15일부터 구국의 소리방송을 대신하는 조선중앙방송을 중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구국전선을 통해 대남 선전·선동을 지속하고 있다.

143 『정치사건』, pp. 771-772,

144 통일부, 『2009 북한개요』, p. 462.

145 Ibid., p. 463;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pp. 95-96.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약칭 아·태평화위)는 북한이 아·태지역 미수교 국가들과의 정치·경제·문화교류의 확대·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1994년 5월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설립되었다.¹⁴⁶ 아·태평화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을 두고 있으며, 산하에 정치, 경제, 문화, 관광, 종교 등의 부문별 부서와 연구소들을 두고 있다. 아·태평화위는 민간차원에서 미·일 등과의 창구기능과 저명한 외국 인사의 방북 및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을 추진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는 남북간의 각종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족화해협의회(약칭 민화협)은 1998년 6월 8일 북한이 ‘정당·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면서 정계,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대남 통일전선 단체의 하나이다.¹⁴⁷ 민화협은 대남 접촉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 실장, 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46 통일부, 『2009 북한개요』, pp. 463-464; 장철현은 아·태평화위는 사실상 건물도 성원들도 없는 유명조직이며, 통일전선부 정책과의 가명으로 보고 있다.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p. 102.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통일전선부 과장은 아·태평화위 참사 직함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147 통일부, 『2009 북한개요』, p. 464.

3. 문화교류국

가. 연혁과 임무

문화교류국¹⁴⁸은 간첩(공작원) 남파, 공작원 밀봉교육, 한국 내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공작, 해외공작 등 정통적인 정보·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문화교류국은 노동당 연락부의 후신으로 북한 내에 존재하는 대남 정보기구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부서이며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통일전선부가 노동당의 선전선동부에 해당한다면 문화교류국은 조직지도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다.

문화교류국은 공작원을 남파시켜 남한에 지하당을 만든 뒤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지하당을 매개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문화교류국은 전투원이 아닌 대남간첩 교육 및 파견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보내는 자금도 관리하고 있다.

1946년 북로당 산하 '서울공작위원회'가 모태가 되어 1947년 북조선 노동당 5과로 출발한 문화교류국은 이후 연락부(1975.9)→사회문화부(1988.11)→대외연락부(1998.1)로 변화해 왔으며¹⁴⁹, 2009년 2월 대

148 문화교류국에 대해서는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pp. 469-470의 내용을 수정·보완.

149 1997년부터 조총련과의 사업과 해외동포사업을 담당하여온 강관주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사회문화부의 담당부장으로 되면서 사회문화부의 명칭을 대외연락부로 개칭하고, 남한의 지하조직과 조총련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의 비밀조직과 사업을 주관하였다. 과거에도 이 부서를 연락부라고 부른 적이 있었으며, 이는 조선노동당과 남한 내 지하당 조직의 연락 관계를 담당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p. 314.

남정보기구 개편과 함께 내각으로 이동하면서 225국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2012년 말에 통일전선부로 통합되었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 2016년 4월 문화교류국으로 개칭하였다.¹⁵⁰ 내각 산하였던 225국은 대외연락부의 대남공작 및 조총련 업무를 전부 그대로 관장한 채 내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문화교류국 역시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으나 독립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교류국의 활동으로는 1968년 7월의 통일혁명당 사건과 1990년대 이후 지하당 사건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1992), 민족민주혁명당(1999), 일심회 간첩단(2006)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11년에 적발된 북한 지하당 조직 왕재산도 문화교류국의 정보활동에 따라 우리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동향과 군사 자료 등을 수집·보고하였다.

나. 조직

문화교류국은 공작원들에게 남한정세와 정보수집 및 포섭공작 활동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으며, 공작원들을 남파시킨 후 남한 내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문화교류국은 공작원 교육을 위한 초대소와 공작원들의 파견과 귀환을 위한 연락소를 운영하고 있다.¹⁵¹

150 남파 공작원 출신의 탈북자는 “북한이 225국의 이름을 문화교류국으로 바꾼 것은 공작기구에 부드러운 이미지를 덧칠하고 나서 다양한 대남공작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北, 對南 공작기구 수장에 남파 간첩 출신 임명,” 『조선일보』, 2016. 7. 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00293.html (검색일: 2020년 5. 10).

151 권민웅, “북한의 정보·보안 체계,” p. 558.

문화교류국 산하조직으로는 공작원 양성을 전담하는 봉화정치학원¹⁵²과 함께 남한 자료 연구와 위조신분증 제작 등 공작 장비 연구·조달 등을 담당하는 314 연락소가 있다. 또한, 평양시 교외에 남파 공작원이나 침투 요원들에게 남한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 터널을 뚫고 그 내부에 남한의 거리와 시설물 등을 실물처럼 만들어 놓은 남조선환경관 역시 문화교류국이 관장한다. 이와 함께 문화교류국은 공작원 및 무역 전문 요원들을 내세워 공작자금 조달 및 외화벌이 목적의 무역상사도 운영하고 있다.¹⁵³

문화교류국은 북한에 유럽의 명품과 사치품을 대고 있는 싱가포르 회사 ‘신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사를 통해 노동당 39호실¹⁵⁴이 운영하는 평양의 북새상점과 류경상점에 사치품을 공급하고 있다. 사치품 판매 이익은 39호실 몫이나, 문화교류국도 싱가포르 ‘신사’의 사치품 수출대금 일부를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신사’를 관리하며 북한 고위층에게 사치품을 공급한 문화교류국 출신의 리혁은 이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¹⁵⁵

문화교류국의 전신인 대외연락부의 부장은 강관주(일명 강주일)였다. 강관주는 1997년부터 대외연락부의 부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내각 산하의 225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유임되었다. 현재 문화교류국장은 오랫동안 문화교류국에서 대남 정보활동에 종사해온 윤동철이며, 2016년 4월 225국에서 문화교류국으로 개칭하면서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에서 ‘선생’이라는 호칭을 듣는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은 남한의 정치·경제·국제·문화에 해박하고 ‘뺏속’까지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공작원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¹⁵⁶

152 봉화정치학원 명칭은 과거 대남공작 교육기관의 원조였던 강동정치학원의 맥을 이어 조국통일의 ‘봉화’를 지핀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p. 206.

153 Ibid., pp. 206-207.

154 북한은 과거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38호실과 39호실을 운영하였으나 39호실로 통합하였다.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기구, 노동당 39호실로 통합,” 『연합뉴스』, 2016. 9. 29, <https://www.yna.co.kr/view/AKR20160929075151014> (검색일: 2020. 5. 15). 38호실은 북한 내 외화상점들과 고려호텔 등 대외봉사기관 운영을 통하여 외화를 마련하였으며, 대성지도국, 룡악산지도국, 모란지도국 등을 두고 있다. 39호실은 금광업, 사금생산, 특정 농수산물 수출을 통해 외화를 마련하고 있으며 금강지도국, 대흥지도국 등을 비롯하여 각도·시·군들에 5호 관리소들을 두고 있다.

155 “대남공작기관 ‘문화교류국’ 사치품 무역 관리,” 『TV 조선』, 2017. 7. 2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90169.html (검색일: 2020. 5. 24).

156 “[Why] 조선노동당 ‘문화교류국’... 호칭은 선생, 본업은 암살·테러.”

V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구의 특징

1. 김정은 직할 체제를 통한 정보기구 운용
2. 김여정과 조직지도부를 통한 정보기구 감시·통제
3. 정보기구의 사이버공격 증가
4. 정보기구의 조직 변화
5. 국가보위성의 대남 정보활동 강화

1. 김정은 직할 체제를 통한 정보기구 운용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당), 국무위원회 위원장(정),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군) 직책을 통해 당·정·군의 정보기관들을 직접 통제·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 정보기구로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군 보위국을 두고 있으며, 대남·해외 정보기구로는 경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을 두고 있다. 이 중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은 노동당 소속,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경찰총국은 국무위원회 소속, 보위국은 조선인민군 소속으로 각각 배치되어 있다. 김정은은 북한의 정보기관들에 대한 직할 체제 구축을 통해 상호 간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는 '1호 보고 단위'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운용은 정보의 사용자 즉 최고 통치권자인 김정은이 정보기구의 조직과 활동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 유일지배체제라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북한의 정보기관들은 김정은에 대한 직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표면적으로 각각의 정보기관들을 통제하는 중간기구를 둔 적도 있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의 '대남사업총국'과 196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 '대남사업담당 비서'를 노동당에 두고 대남 정보활동을 총괄·관장하였다. 현재도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으로 김영철이 대남·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최고 통치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정보기관들은 최고통치자의 지도와 통제 속에 상호 검열·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기관이 절대권력을 갖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¹⁵⁷

과거 김일성·김정일은 북한의 정보기관들에 대해 신뢰와 질타를 통해 상호 충성경쟁을 유도했으며, 정보기관들의 과도한 충성경쟁은 숙청과 처벌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정보기관들은 기관 본위주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충성경쟁을 지속해왔으며, 최고지도자로부터 ‘믿어주는 일꾼’, ‘믿어주는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사찰을 통해 간부·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¹⁵⁸ 그동안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관심 사항에 따라 개별 정보기관별로 힘을 실어주었으며, 이는 최고지도자가 어느 부문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 작용했다.

2. 김여정과 조직지도부를 통한 정보기구 감시·통제

북한의 노동당은 정책지도 기능과 생활지도(조직·사상) 기능을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당의 영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당 정책의 수립·결정은 당 정치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시행하며, 정책의 집행·감독은 당 정무국 산하 전문부서들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조직생활 지도는 당 정무국 산하 조직지도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당 사상생활 지도는 선전선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까지 조직지도부에 여러 명의 제1부부장을 두고 있었으며, 이들은 종합, 당 생활지도, 검열, 간부(인사), 행정(사법·검찰),

본부당 등을 분담하였다.¹⁵⁹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제1부부장을 4~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제1부부장의 업무 분담도 사회 담당과 군 담당으로 이분화하였다. 사회담당 제1부부장은 부부장 여러 명을 두고, 국가, 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公安·사법·검찰, 과학·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해외공관 등의 당 위원회와 창광보안서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군 담당 제1부부장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군종·병종·군부대 등의 당 위원회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당·정·군에 산재하여 있는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감시·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부여하고 있다. 조직지도부는 각각의 정보기관들에 독립부서인 정치국을 두고 있으며, 정치국에 조직지도부의 정치 요원들을 파견하여 당적으로 개별 정보기관들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개별 정보기관들의 정치국장장은 정보기구의 장들과 대부분 같은 직급이나 정보업무 이외의 권한은 정보기관의 장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인민군 총정치국, 국가보위성 정치국, 사회안전성 정치국 등은 도(직할시) 당 위원회와 동급의 위상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사무국, 외무성 등 국가·정부기관 당 위원회는 기관이 소재한 지역당 위원회에 소속된 초급당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정보기구에 대한 감시·통제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행정부에

157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p. 462; 김화식, “북한 공안기관의 사회통제 기능,” 『북한』 466호 (2010), p. 140.

158 광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p. 43.

159 1980년대 말에는 염기순 제1부부장이 당 생활지도과, 리제강 제1부부장이 간부과, 리찬선 제1부부장이 본부당, 현철규 제1부부장이 검열과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장성택 제1부부장이 행정과를 담당하였다.

서 담당하여왔다. 북한은 1980년대 말 노동당 행정부를 사법·검찰·공안 부문에 대한 정책지도를 담당하는 정책부서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사회안전부(현 사회안전성) 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놓고 조직지도부와 마찰을 빚은 후 해체되었다. 당시 행정부장을 맡고 있던 김시학은 좌천되었으며, 행정부의 모든 기능은 조직지도부로 흡수되었다.¹⁶⁰ 그리고 조직지도부에 행정부문 담당 제1부부장 직제를 만들고 장성택을 임명하였다. 당시 조직지도부 행정부문은 사법·검찰·사회안전 부문에 대한 정책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까지 담당한 무소불위의 권력부서였다.

1990년대 초반 해체되었던 노동당 행정부는 2007년에 재등장하였다. 당시 북한은 조직지도부의 행정부문 기능을 독립시켜 행정부를 부활시키고 장성택을 행정부장에 임명하였다. 행정부는 조직지도부가 가지고 있던 사법·검찰·공안 부문에 대한 당 생활지도 기능과 정책지도 기능을 모두 장악하였다. 장성택은 행정부를 기반으로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악화상황에서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위상과 권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성택이 2013년 12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와 횡령·부패 등의 혐의로 출당·해임되고, 4일 후에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판결을 받은 이후 행정부는 해체되고 그 기능은 조직지도부에 흡수되었다. 조직지도부의 7과는 기존 행정부의 업무였던 사법·검찰·사회안전성에 대한 당 생활지도를 주관하고 있으며, 8과는 국가보위성, 11과는 대남·해외 정보기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¹⁶⁰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현재 북한 정보기구에 대한 조직지도부의 감시·통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조직지도부의 행정부문을 장성택 제1부부장이 맡았던 것처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법·검찰·공안 부문에 당의 정책지도와 생활지도를 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은 ‘대남사업총화회의’ 개최를 알리면서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 부위원장인 김영철과 김여정 제1부부장을 동시에 회의주관자로 명기하였다.¹⁶¹ 또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단독으로 대남·대미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볼 때 대남·대미 부문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사회담당(조용원), 군담당(김조국), 사법·검찰·공안 담당(김여정)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⁶² 이는 김정일 시대의 제1부부장 2인 체제에서 1990년대 이전 김일성 시대의 다수의 제1부부장 체제로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정보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노동당 정무국 산하의 전문부서를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20년 8월 5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정무국 회의에서 “중앙당 신설부서 기구문제를 검토심”¹⁶³했으며, 연이어 개최된 8월 13일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16차 정치국 회의(8.13)를 통해 중앙당 신설부서 기구들을 심의·결정하였다고 밝혔다.¹⁶⁴ 만약 북한이 정보기구를

¹⁶¹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0. 6. 9.

¹⁶² 통일부는 선전선동부에서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에 대해 ‘소속 불명’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서는 김조국과 조용원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0』, p. 1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heme/peopleRelation.do> (검색일: 2020. 10. 11).

¹⁶³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4 차 정무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0. 8. 6.

¹⁶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 6 차 정치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0. 8. 14.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면, 이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새로 등장한 군정지도부와 함께 두 번째 기구가 될 것이다.

군정지도부는 2019년 말 신설되었으며,¹⁶⁵ 군정지도부장은 인민보안상을 지낸 최부일이 맡고 있다. 군정지도부는 기존의 당 군사부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개편한 조직인지, 아니면 군사부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든 것이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¹⁶⁶ 다만, 군정지도부라는 명칭을 고려할 때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정보기구를 담당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한다면 이는 조직지도부의 행정과를 과거 행정부처럼 새로운 전문부서로 확대·개편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신설부서에 대해 “사회주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 유지 기능”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⁶⁷ 그리고 신설부서¹⁶⁸가 만약 과거 당 행정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신설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165 국정원은 2020년 8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작년 말에 군정지도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군부를 당 통제속에 가둬...조직부·군정지도부 이중잠금,” 『연합뉴스』, 2020. 8. 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1057800504?section=search> (검색일: 2020. 8. 24).

166 당 조직지도부 군사지도과를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 승격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北, 장성택 처형 때 없앤 조직행정부 부활,” 『조선일보』, 2020. 8. 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012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20. 9. 21). 그러나 군정지도부를 맡고 있는 최부일의 이전 직책이 군사부임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조직지도부의 군사지도과가 확대·개편되었다면, 조직지도부의 군사부문 담당 제1부부장인 김조국이 군정지도부장을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

167 북한은 신설부서에 대해 “사회주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담보하며 우리의 계급진지, 사회주의 건설을 철통같이 보위해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1 6차 정치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0. 8. 14.

168 신설부서의 명칭에 대해 ‘조직행정부’라는 ‘실’이 있다. “北, 장성택 처형 때 없앤 조직행정부 부활,” 『조선일보』, 2020. 8. 21. 그러나 장성택의 행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북한이 ‘행정부’가 들어가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정보기구의 사이버공격 증가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대남·해외 정보활동을 선진화·고급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정찰총국의 기술정찰국을 중심으로 사이버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제도적 기반과 정규군을 가진 일본군과 맞서 싸우던 항일빨치산의 투쟁무대”와 동일시하면서 “북한군의 정보 모략전, 해킹, 사이버심리전, 대남공작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고, 반면에 적대국은 인터넷이 제도화되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난 공격위험을 가지고 있는 더없이 유리한 작전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⁶⁹ 북한은 사이버공격을 비대칭 역량차원에서 강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행위주체를 특정할 수 없어 위장부인(plausible deniability) 가능성이 크다는 전술적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¹⁷⁰ 김정은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169 김홍광, “북한의 사이버테러 정보전 능력과 사이버보안 대책 제언,”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경기산업기술보안협의회, 『국가 산업기술유출 대응 콘퍼런스』 (2010), p. 5.

170 서동구, “김정은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정보·보안기구,” p. 3.

〈표 IV-1〉 김정은 사이버 관련 교시 내용

구분	교시내용	
김정은	사이버공격의 중요성 강조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2013년 8월 정찰총국 군간부들에게)
	사이버전력의 중요성 강조	강력한 정보통신 기술, 정찰총국과 같은 옹명한(사이버) 전사들만 있으면 그 어떤 제재도 뚫을 수 있고, 강성국가 건설도 문제없다 (2013년 4월 7일 정찰총국 해커부대 방문시)
	사이버거점 장악과 무력화 지시	적들의 사이버 거점들을 일순에 장악하고 무력화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 추라 (2014년 6월 28일 정찰총국 사이버부대인 121국 비공개 방문시)
	전략사이버 사령부창설 지시	전략사이버사령부 창설 지시(2012년 정찰총국 산하기구 110호 연구소 방문시)
	사이버 인력확보 지시	각 도의 제1중학교에서 유능한 컴퓨터 전문가를 양성하라 지시(2009. 10)

※ 출처: 김윤영,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2호 (2016), pp. 247-248.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크게 사이버 정보수집, 사이버심리전,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분야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¹⁷¹ 대표적인 사이버 정보수집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컴퓨터 3,000여 대 해킹(2014)과 작계 5027 유출(2016) 사건이 있으며, 북한은 정보수집을 위해 우리의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주요 연구소 및 언론사들에 대한 해킹을 지속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은 대남심리전 차원에서 북한이 운영하

는 직영사이트와 해외 친북 사이트를 활용하여 허위정보 및 역정보 등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¹⁷² 대남 사이버심리전은 통일전선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심리전 인터넷 사이트는 우리민족끼리(조평통 홈페이지), 구국전선(반제민전 홈페이지),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 류경, 백두넷, 김일성방송대학 등 140여 개에 달하며, 직영사이트는 노동신문 등 12개가 있다. 현재 북한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대남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통일전선부는 이른바 ‘댓글팀’을 운용하며 우리사회 내부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사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공개 게시판과 토론방 등에 정부기관과 주요인사 등에 관한 악성루머를 유포하여 곤경에 빠뜨리는 ‘Flame 기법’도 활용하고 있다.¹⁷³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디도스(DDos) 공격과 해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¹⁷⁴ 북한은 2009년 ‘7·7 디도스 공격을 시작으로 농협 전산망 마비(2011), 6·25 사이버 공격 및 3·20 사이버테러(2013),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및 청와대 사이버 공격(2014), 소니 픽쳐스 해킹(2014), 서울 메트로 해킹사건(2015) 등 사이버테러를 지속하고 있다.¹⁷⁵ 북한은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및 공공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금전탈취 목적의 사이버범죄 역시 시도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171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윤규식,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위협 전망,” 『군사논단』 제68호 (2011), pp. 69-70; 유동열, “북한의 대남 사이버위협 실태와 대책,”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자료집 (2014), pp. 27-32; 조성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p. 131; 김일기, “사이버공간과 남북한,”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76-81 참조.

172 대남심리전에 대해서는 유동열, “북한의 대남 사이버위협 실태와 대책,” pp. 28-29 참조.

173 김일기, “사이버공간과 남북한,” p. 77.

174 유동열, “북한의 대남 사이버위협 실태와 대책,” pp. 30-31; 조성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p. 131 참조.

175 김일기, “사이버공간과 남북한,” p. 77.

전문가 패널 전문가 보고서(2019.8.5)』는 북한이 2015년 12월~2019년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최대 20억 달러(약 2조 4천억 원)를 탈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¹⁷⁶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공격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2017년 이후로만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15건의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이 있었고, 이 가운데 10건은 한국의 거래소를 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공격을 시행하는 조직들을 당·정·군 산하의 정보기관에 두고 있다. 북한의 주요 사이버 공격기구들은 총참모부, 정찰총국,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에 소속되어 있다.

〈표 V-1〉 북한 사이버공격 기구의 기능과 역할

담당부서		기능과 역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 사이버전사 양성, 연구 · 한국군 대상 사이버심리전 · 군지휘통신 교란, 사이버전
국무위원회	정찰총국	· 사이버공작 요원 양성, 연구 · 대남정치, 군사정보 해킹, 사이버공작 실행 · 전담요원 해외파견, 사이버테러 등 공작수행 · 대남 사이버심리전 · 해커부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 대남 사이버심리전 전담 · 140여 개 웹사이트(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운영 · 트위터 등 활용 SNS 공작 · 여론조작 댓글팀 운영 허위정보, 사회 교란 시도
	225국	· 한국 내 전략정보 수집 · 사이버 드보크, 사이버 간첩 교신

※ 출처: 유동열, “북한의 대남 사이버위협 실태와 대책,” p. 26.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사이버 공격이 ‘저비용-고효율’의 대남공작 수단이며 남북한 간에 있어 비대칭성을 갖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인트라넷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분리와 폐쇄성을 보여주고 있다.¹⁷⁷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공간 낙후성이 오히려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한 전략적 입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격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설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76 “北,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공격으로 2조원대 탈취 혐의,” 『연합뉴스』, 2019. 8. 5,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5011200073> (검색일: 2019. 9. 30).

177 북한의 사이버환경에 대해서는 김일기, “사이버공간과 남북한,” pp. 68-69 참조.

4. 정보기구의 조직 변화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보기구의 조직과 기능에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첫째, 대남·해외정보 기관으로서 정찰총국의 신설이다.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찰총국의 신설은 대남·해외 정보활동을 기존의 '당' 중심에서 '군' 중심으로 전환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정찰총국 창설 이후 북한은 지하당 구축, 테러, 무력도발을 병행하는 강경 위주의 공세적 정보활동을 추진하였다.

둘째, 정보기구의 명칭 변경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국가안정보위부를 '국가보위성'으로, 군 보위사령부를 '보위국'으로, 인민보안부는 '인민보안성'을 거쳐 '사회안전성'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면서 추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의 '김일성 따라하기'의 일환으로 김일성 시대에 사용했던 명칭들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통일전선부 산하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승격시켰다. 북한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에서 국가기구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향후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경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격'과 관련한 충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아마도 현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종교단체(그리스도연맹중앙위원회, 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 가톨릭중앙위원회), 천도교청우당, 사회민주당 등 대남 전문기관들에 대한 통합적 지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내각의 225국을 노동당의 통일전선부로 환원하면서 문화교류국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25국은 2009년 2월 내각 기구로 편입되었으나 2012년 말경 형식상 통일전선부 기구에 속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다. 225국은 내각에 소속되어 있을 때도 내각의 지휘를 받지 않고 노동당의 통제속에 김정은에게 직보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현재에도 통일전선부에 속해 있지만, 주요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김정은에게 직보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가보위성의 '특별군사재판소' 설치이다. 북한은 2013년 12월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국가보위성에 특별군사재판소를 설치했다. 특별군사재판소의 설치는 체제전복 사건 등 반국가사범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처벌을 집행하는 의도에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군사재판소는 상설조직이라기보다는 비상설조직으로 국가보위성의 사건에 해당하는 반국가·반체제 범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5. 국가보위성의 대남 정보활동 강화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국가보위성을 활용한 대남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과거에는 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에 특화된 기구였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정보활동은 주로 정찰총국과 당의 통일전선부 및 문화교류국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 국가보위성은 반탐정국, 해외반탐국, 북남대화보위국 등을 활용하여 대남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인 2009년 초경부터 '비법월경자'와 '행불자'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현안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국가안정보

위부를 중심으로 인민보안부와 기타 관계 기관들이 협조하여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북한은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 보위사령관 출신인 김원홍을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함과 동시에 군부에서 담당하던 국경경비 업무를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관시켰다. 2010년경 군부 예하인 국경경비총국과 세관 통행 등의 관리를 국가안전보위부가 전담하였다. 그 결과 과거 변경지역에서 밀수범과 월경자 등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중국 내 탈북자 체포와 신상 확인에 국한되던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의 정보활동이 대남 정보활동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국가보위성의 대남 정보활동은 탈북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보위성의 탈북자 관련 정보활동은 위장 탈북 및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재입북 공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송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위성의 방첩활동이 소극적 방첩활동에서 적극적 방첩활동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보위성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해외공관 및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와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공관 안전대표부의 인원을 확대하였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해외 주재 외교관과 무역대표부 인원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탈북자 관련 정보활동은 대내적으로는 국가보위성의 주관하에 사회안전성과 정찰총국 등 유관 정보기관들이 협조하는 체제이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탈북자 관련 기본 업무는 국가보위성이 전담하며, 한국·해외에서의 정보수집과 확인 등의 영역은 대남 정

보기관들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있다.¹⁷⁸

국가보위성 북남대화보위국은 대남사업 부문에 대한 감시·통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대남사업과 관련된 대화 및 접촉에 참여하는 북한 인원들에 대한 대열보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남대화보위국은 남북 행사 현장에서 북한 인원들에 대한 감시·장악·통제역할을 진행하는 동시에 북한 인원과 접촉하는 남한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내부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금강산관광 보위부와 개성공단 보위부가 있다.

178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VI

결론: 전망과 시사점

북한은 김정은 시대 출범 초기에 정권의 안정과 체제유지라는 급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김정일의 급사로 인해 짧은 후계기간을 가진 김정은은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신속한 장악을 통해 취약한 리더십을 확보해야만 했다. 김정일 와병 이후 이루어진 북한 정보기구의 개편은 취약한 리더십을 가진 김정은이 권력 엘리트들을 신속히 장악하고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김정은은 초기의 권력 안정화 이후 체제 생존과 정권 안정을 위해 정보기구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정보와 보안역량을 한층 강화해 왔다. 현재 북한의 정보기구 체계는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 국무위원회의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경찰총국, 조선인민군 보위국 등 당·정·군에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 정보기구는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군 보위국으로 대남·해외 정보기구는 경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으로 구분되어 있다. 북한의 정보기구는 당·정·군에 분산되어 있으며, 중간기구를 두지 않은 채 김정은에게 직보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들은 당·정·군에 각각 배치되어 있지만, 정보활동 업무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향후 북한의 정보기구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의 정보기구를 담당할 과거 노동당 ‘행정부’와 유사한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국정운영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정책실패시 책임회피 차원”에서 ‘위임통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¹⁷⁹ ‘위임통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정은이 만기친람

179 2020년 상반기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대두되었으며, 국정원은 2020년 8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위임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보] 국정원 “北 김정은, 김여정 등에 국정 위임통치,” 『연합뉴스』, 2020. 8. 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0153300001?section=politics/all> (검색일: 2020.

(萬機親覽)형 업무 스타일에서 핵심 간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경제분야의 박봉주와 김덕훈, 군사분야의 최부일과 리병철, 대남·대미분야의 김여정과 김영철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직 측면에서도 군정지도부의 신설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정보기구를 담당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한다면 이는 조직지도부의 행정과를 과거 행정부처럼 전문부서로 확대·개편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부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보기구를 담당하는 이 부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현재 정찰총국에 집중된 대남·해외 정보기구의 분산과 노동당으로의 이전을 예상할 수 있다. 정찰총국의 신설은 선군시대에 이루어진 정보기관 개편으로 군에 대남·해외 정보기관을 집중시키고 이를 국방위원회가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김정은의 정보기구 통제를 신속·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당 중심의 국가 운영 시스템과 정보기구 명칭의 김일성 시대로의 회귀를 통해 볼 때 정찰총국에 집중된 대남·해외 정보기구의 분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진전 역시 노동당 중심으로 정보기구 개편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핵개발과 동시에 심각한 경제난 해결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해결은 대북제재의 해제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9년 6월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현재까지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북한의 대내외 정보환경은 정찰총국 중심의 군사적 정보활동보다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비군사적 정보활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북한은 정보기구를 활용한 사이버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정보기구는 정찰총국의 기술정찰국을 중심으로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이 사이버공격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사이버 정보수집, 사이버테러, 사이버심리전, 사이버범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저비용-고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보활동 수단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 유입이 쉽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금전탈취 목적의 사이버범죄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대남·해외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북미 관계와 관련하여 우리와 미국의 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사이버 정보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편, 사이버심리전 역시 인터넷 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여 북한체제 선전과 함께 우호적 대북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보기구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는 핵심기체이며 대남혁명을 위한 전위부대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정보기구의 변화와 활동에 관한 연구와 관찰은 향후 북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정보활동에 대한 추적과 방첩·안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8. 20).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대북 정보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최근 상황은 지속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그리고 연이은 수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내년도 제8차 당 대회의 성과 창출을 위한 주민들이 '80일 전투'에 동원되면서 불만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등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정보기관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활용한다면 정보기관과 북한 주민 간 갈등 및 반목 그리고 정보기관 간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 정보기구의 정보활동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특수성과 정보기구의 비밀성으로 인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북한 정보기구의 구체적 작동과 운영시스템까지는 연구를 진전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북한 정보기구의 정태적 연구에 머무른 채 동태적 연구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비해 북한 정보기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시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차별성도 지니고 있다. 향후 북한 정보기구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제공되어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가정보학과 북한학의 학문적 진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북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Nor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Kim Jong-un Era

Kim, Il-Gi

Kim, Ho-Ho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Kim Jong-un era. In the Kim Jong-un era, the system of intelligence agencies in North Korea maintains its basic framework in 2009. The 225th Bureau, which moved to the Cabinet, returned to the Labor Party and was renamed the Cultural Exchange Bureau. North Korea's intelligence agencies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depending on their work scope.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are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South Korean and overseas intelligence agencies are Security Bureau, while South and overseas intelligence agencies are the General Bureau of Reconnaissance, United Front Department, and the Bureau of Cultural Exchange.

Nor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Kim Jong-un era show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North Korea's intelligence agencies are establishing a system to report directly to Kim Jong-un. North Korea's intelligence agencies are assigned to the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respectively, but they are directly directed and controlled by Kim Jong-un for their information activities. Second, the first vice director Kim Yo-jong and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OGD), are instructing and supervising intelligence agencies at the party-level. The OGD has a Political Bureau as an independent department for each intelligence agency and dispatches political agents from OGD to the Political Bureau to monitor and control individual intelligence agencies at the party level. Third, cyberattacks by Nor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are increasing. The United Front Department and the Bureau of Cultural Exchange participate in the cyberattack, led by the Technology Bureau of General Bureau of Reconnaissance. North Korean cyberattacks appear in cyber information collection, cyber terrorism, cybercrime, and cyber psychological warfare. Fourth, the organizational changes in the North Korean intelligence agency were as follows: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Reconnaissance Bureau, the change of the name of the intelligence agencies,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to a national-level organ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military Court of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Fifth, information activities related to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are increasing. As the number of defectors increased in the Kim Jong-un era,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was in charge of solving the problem. As a result,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is entirely responsible for intelligence activities concern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other intelligence agencies assist the activities related to South Korea and overseas.

In the future, we expect that Nor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will change in three main ways. First, North Korea will establish a new department similar to the former Labor Party's "administration" to take charge of the North Korean intelligence agency. Second, it will decentralize intelligence agencies that manage South Korean and overseas tasks, currently concentrated in the General Bureau of Reconnaissance. Also, some of the agencies are expected to be transferred to the Labor Party. Lastly, North Korea

will enhance cyberattacks using Nor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Keywords

North Korea, Intelligence Agencies,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The General Bureau of Reconnaissance,
The United Front Department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원준. 『국가정보의 이해: 국가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서울: 서석, 2005.
- 곽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보고서 (2018).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서울: 국가정보원, 2020.
- 국방부. 『국방백서 2010』. 서울: 국방부, 2010.
-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하권』.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서울: 기파랑, 2013.
-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_____. 『김정은 시대 노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2002』. 서울: 북한연구소, 2003.
- NK지식인연대. 『클로즈업 6월, 북한내부실상』. 서울: 세계북한연구센터, 2015.
- 오경섭. 『정치엘리트 응집력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성남: 세종연구소, 2013.
- 유영구. 『남북을 오고 간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글, 1993.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서울: 한울, 2003.
- 윤대일.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서울: 월간조선사, 2002.
- 전웅. 『현대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5.
- 전현준. 『북한의 사회 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2003.
- 중앙정보부. 『대남공작사』 제2권. 서울: 중앙정보부, 1973.
- 통일부.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9.
- _____.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0』. 서울: 통일부, 2020.
- 한희원. 『국가정보』. 서울: 법률출판사, 2011.
-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1999.
- Abram N. Shulsky and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Washington D.C.: Potomac Books Inc., 2002.
- Bruce D. Berkowitz and Allan E. Goodman. *Best Truth: Intelligence in the Information Age*,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J. Michael Waller. *Secret Empire: The KGB in Russia Today*, Boulder: Westview Press, 1994.
- ### 2. 논문
- 권민웅. “북한의 정보·보안 체계,” 문정인 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2.
- 김광진. “북한의 대남테러 조직 및 테러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스라엘 국제대테러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자료집 (2016).
- 김용환.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제5권 2호 (2017).
- 김윤영. “위장탈북자 간첩 실태 및 대책.” 『북한학보』 제39집 2호 (2014).
-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한국국가정보학회 엮음.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3.
- _____. “사이버공간과 남북한.” 채재병 외.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김일기·김형수.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통일정책.” 『세계지역논총』 34집 3호 (2016).

김정민. “북한노동당 35호실, 무엇을 하는 곳인가?.” 『북한』 제341호 (2000).

김흥광. “북한의 사이버테러 정보전 능력과 사이버보안 대책 제언.”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 경기산업기술보안협의회. 『국가 산업기술유출 대응 콘퍼런스』 (2010).

문정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문정인 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2.

박형중. “김정은 권력 정착과정에서의 군부 동향.” 『Online Series』 CO 13-23.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서동구. “김정은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정보·보안기구.” 『Online Series』 CO 15-04.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서유석 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실태와 북한을 움직이는 사조직 ‘김일성고급당 학교 동기모임.’” 『북한』 제440호 (2008).

성준혁.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북한경찰의 통제 유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오항균. “김정일시대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유동열. “북한 정보기구의 변천과 현황.” 『국가정보연구』 제11권 1호 (2018).

_____. “북한의 대남 사이버위협 실태와 대책.”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자료집 (2014),

윤규식.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위협 전망.” 『군사논단』, 제68호 (2011).

이영무·신경엽. “국가정보의 개요.” 국가정보연구회. 『분단국의 국가정보』. 서울: 박문각, 2012.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북한조사연구』 제11권 1호 (2007).

전성병 외. “북한 군사지휘체계 연구.” 『군사평론』 408호 (2010).

조성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최주환. “북한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체계 및 활동.”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1997).

최준택. “북한의 정보기구.” 국가정보연구회. 『분단국의 국가정보』. 서울: 박문각,

2012.

3. 기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지도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6. 5. 20.

“김정남 암살에 北정찰총국 19과 최순호 과장이 중심역할.” 『연합뉴스』. 2017. 2. 24. <https://m.yna.co.kr/view/AKR20170224188400073> (검색일: 2017. 10. 20).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기구, 노동당 39호실로 통합.” 『연합뉴스』. 2016. 9. 29. <https://www.yna.co.kr/view/AKR20160929075151014> (검색일: 2020. 5. 15).

“김정호 북 사회안전상 부상으로 강등.” 『RFA』. 2020년 9월 15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kw-09152020101642.html (검색일: 2020. 10. 11).

“대남공작기관 '문화교류국', 사치품 무역 관리.” 『TV 조선』. 2017. 7. 2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90169.html (검색일: 2020. 5. 24).

“美, 北 3대 해킹그룹 정조준...적나라한 해킹실태 · 정체 드러나.” 『연합뉴스』. 2019. 9. 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4003600072> (검색일: 2019. 9. 30).

“美재무부, 북미실무협상 재개 전망 속 北 해킹그룹 3곳 제재.” 『연합뉴스』. 2019. 9. 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3039153071> (검색일: 2019. 9. 20).

“방첩업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B2%A9%EC%97%85%EB%AC%B4%EA%B7%9C%EC%A0%95/\(29289,20181120\)](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B2%A9%EC%97%85%EB%AC%B4%EA%B7%9C%EC%A0%95/(29289,20181120)) (검색일: 2020. 10. 11).

“북 ‘조평통’ 국가기구화...남 통일부와 ‘격’ 맞추기.” 『한겨레』. 2016. 6. 30. <http://>

- 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0462.html (검색일: 2020. 9. 21).
- “北 “군 보위국장 조경철”...보위사령부 격하? 아닌 듯.” 『NewDaily』. 2016. 3. 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3/21/2016032100041.html> (검색일: 2020. 5. 12).
- “北 간첩 ‘황장엽 암살 후 투신자살하려 했다.’” 『조선일보』. 2010. 4. 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21/2010042101441.html (검색일: 2020. 10. 11).
- “北 해킹 전사들의 조직명은 ‘천리마’...하부조직 주특기 명확.” 『중앙일보』. 2018. 2. 21. <https://news.joins.com/article/22385751> (검색일: 2019. 8. 10).
- “北,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공격으로 2조원대 탈취 혐의.” 『연합뉴스』. 2019. 8. 5.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5011200073> (검색일: 2019. 9. 30).
- “北, 對南 공작기구 수장에 남파 간첩 출신 임명.” 『조선일보』. 2016. 7. 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00293.html (검색일: 2020. 5. 10).
- “北, 장성택 처형때 없던 조직행정부 부활.” 『조선일보』. 2020. 8. 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012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20. 9. 21).
- “북, 탈북자 재입북 유인 공작 진행.” 『RFA』. 2018. 6. 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defectorreenter-06052018133841.html (검색일: 2010. 10. 1).
- “북한, ‘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으로 이름 바꾼듯.” 『동아일보』. 2020. 6. 3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03/101338542/1> (검색일: 2020. 9. 2).
- “북한군 보위사령부 베일을 벗긴다.” 『시사저널』 1620호 (1997).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32> (검색일: 2020. 10.

- 10).
- “북한권력기구도.”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heme/getPowerStructureDang.do> (검색일 : 2020. 9. 21).
-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heme/peopleRelation.do> (검색일: 2020. 10. 11).
-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답화.” 『조선중앙통신』. 2020. 6. 5.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7 기 제 4 차 확대회의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지도.” 『노동신문』. 2020. 5. 24.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1 6 차 정치국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0. 8. 14.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4 차 정무국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0. 8. 6.
- “김정은, 군부를 당 통제속에 가둬...조직부·군정지도부 이중잠금.” 『연합뉴스』. 2020. 8. 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1057800504?section=search> (검색일: 2020. 8. 24).
- “[2보] 국정원 “北 김정은, 김여정 등에 국정 위임통치.” 『연합뉴스』. 2020. 8. 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0153300001?section=politics/all> (검색일: 2020. 8. 20).
- “[Why] 조선노동당 '문화교류국'... 호칭은 선생, 본업은 암살·테러.” 『조선일보』. 2017. 2. 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4/2017022401452.html (검색일: 2020. 5. 10).

INSS 연구보고서 2020-6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김기정
주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일	2020년 12월
발행일	2020년 12월
편집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ISBN	979-11-89781-31-6(94340) 979-11-89781-03-3(전18권)
가격	비매품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